

연구자료 2011-01

2010

연구과제 요약집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차 례

◆ 기본연구과제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3
국가수준의 유치원평가 체계화 방안	8
가구유형별 육아지원 요구와 육아지원방안 연구	16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21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	26
아동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욕구	31
한국아동패널 2010	36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델 「영차」 시범적용의 과정 및 성과 분석(II) ...	44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51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56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62

◆ 수탁연구과제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모델 개발 연구	71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지원체계 개편 방안	76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를 위한 이중언어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82
평가인증 활성화 및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질 제고 방안	87
중국 동포 자녀양육 지원방안 연구	93
보육 시설장·교사 윤리강령 개발 연구	98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방안	103

기본연구과제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서문희, 최윤경, 신윤정, 이세원

1. 연구 목적 및 방법

- 국내 영유아가구의 가계소비 자료를 수집하여 총 양육비와 항목별 양육 소요비용을 산출하여 양육비 통계를 생산하고, 양육비용 관련 정책의 근거를 제공함.
- 이론적 배경으로 자녀 양육비 추정방법을 검토하고, 미국, 호주, 일본의 자녀 양육비용 추계 사례와 그 활용성 등을 검토하였음. 또한 국내 양육비용 관련 선행 연구를 수집, 검토하였음.
- 연구자료로 통계청 기본자료를 분석하고, 영유아 가구 소비지출 가계부 조사를 실시하였음.
 - 통계청 2009년 가계동향조사 연간 자료를 분석하였음. 응답 가구수는 총 10,881 가구이며, 월 단위 자료의 규모는 총 85,197여개의 월로 구성되어 있음. 성인과 영유아로 구성된 가구를 선별하여 월 단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하였음.
 - 영유아 수, 모취업여부 및 소득수준별 가구 단위 양육비와 한자녀 가구 아동연령별 양육비 지출을 추정하였음
 - 영유아 가구 일일 소비지출 가계부조사를 실시하였음. 전국 5대 도시를 중심으로 약 25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2010년 6월 한 달간 일일가계부를 작성하게 하여 분석하였음. 가계동향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연령별 영유아 고유 품목 지출을 추정하였음.

2. 외국 사례

- 국가 차원에서의 자녀 양육비 산출이 필요함. 미국이나 호주는 일찍부터 미국의 USDA, 호주의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에서 자녀 양육비 산출 노

력을 기울여 왔으나 일본도 2008년에 내각부가 국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양육비용 산출은 여러 가지 가정 하에 조건을 달아서 양육비 지출을 추정할 수밖에 없음. 동일한 방법으로도 특정 항목의 포함여부 및 작용 비율의 차이 등으로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주도 큰 영향을 줌.
- 미국은 소비지출 중심으로 산출하지만, 일본의 양육비 조사는 주거비나 광열비 등을 제외하였고 비소비 지출인 예·적금과 보험료를 포함하였음. 호주는 Lee가 양육비에 의료비용과 교육비용을 포함시킨 반면, Lovering은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또한 분석 대상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특정 요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함.
- 따라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추계 과정에 있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임.

3. 2009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영유아가구의 소득 및 지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영유아 자녀가 많은 가정이 적은 가정에 비해 소득은 낮고 지출 수준은 높아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증가함. 특히 영유아가 3인 2세대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약 94%로, 상대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다자녀 가구가 많음을 나타냄.
 - 영유아 연령별로 보면 0세 때는 보육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상품서비스, 보건 관련 지출이 많고, 교육에 대한 지출은 영아기 때는 적다가 유아기에 들어 급증하여 만5세 자녀 가구에서는 교육비가 17.1%로 높음.
 - 맞벌이 영유아 가구는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은 영유아가 3인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체 평균보다 10%정도 낮음.
 - 영유아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1인당 평균 8만5천원 정도씩 교육비가 증가하는데, 맞벌이 가구에서는 2인일 때는 평균의 1.4배를 더 지출하며, 3인일 때는 일반가구의 32%로 수준으로 떨어짐. 이는 영유아 3인 맞벌이 가구의 낮은 소득으로 교육비에 투자를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영유아가구의 양육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영유아자녀 1인의 경우 85만원, 2인인 경우 66만원, 3인인 경우 53만원으로 산출되어, 외국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영유아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자녀1인당 양육비용은 줄어들어 규모의 경제를 나타냈음.
 - 그러나 총 양육비와 소득 및 지출대비 양육비 비중은 자녀수 증가에 따라 늘어났음. 이는 자녀공동 및 가구공동 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다자녀가구 지원 시 규모의 경제 고려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함.
- 맞벌이가정의 경우 영유아자녀수별 1인당 양육비가 1인 100만원, 2인 80만원, 3인 74만원이고, 외벌이 가구는 자녀1인당 양육비가 각각 77만원, 62만원, 52만원으로 차이를 보임.
 - 양육비의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가 별 차이가 없음. 즉, 소득 대비 일정 부분을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맞벌이 자녀 비용지원의 배경을 제공함.
- 소득계층별로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총 양육비가 1인 약 58만원, 2인 약 97만원, 3인 111~14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잠정 최저양육비로 요구되는 비용이 수준을 나타냈음.
-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양육비용은 증가하였으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줄지만, 가계지출 대비 양육비 비중은 일관되게 1인 약 40%에서 3인 약 70%로 나타났음.

4. 영유아가구 가계지출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도시 중심으로 조사된 영유아 가구의 가계부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총 양육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 지출대비 양육비 비율이 증가하여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나타냈음.
 - 전체적으로 영유아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자녀1인당 양육비용은 줄어들어 규모의 경제 특성이 나타났으나 유아기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음.
 -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양육비는 많이 지출하지만 양육비의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별 차이가 없음.
 - 저소득층의 양육비 지출이 최저양육비로 요구되는 비용이 최소 30만원 이상

수준은 되어야 함을 나타냈음.

- 가구소득 250만원이하의 경우 양육비는 자녀가 1인인 양부모가정 71만6천 원, 자녀 2인 가구 99만4천원, 3인인 경우 151만5천원임. 영유아가 1명 있는 한부모 가구의 양육비도 77만5천원이고 고유 항목 지출이 40만7천원임.
-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양육비용은 증가하는데,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줄어드나 가계지출 대비 양육비 비중은 일관되게 1인 약 40%에서 3인 약 60%로 나타남. 그러나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소득 대비 비중 감소로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이 큼을 알 수 있음.
- 항목별 양육비는 가구원 수나 아동 연령에 따라 탄력성을 보여, 교육비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
 - 기타 상품 서비스, 질병 및 이유식기, 예방접종, 아기 기저귀에 대한 지출은 0세아가 가장 많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함.
 - 혈연에 의한 보육료는 0세가, 보육도우미는 1세가, 보육시설 이용료는 2세와 5세가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5.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 제언

- 현재 영유아가구에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농어민자녀양육비 지원, 입양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아동수당, 예방접종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보편적 지원은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며, 현금 지원은 보육서비스 대체 기능을 하거나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함.
- 단기적으로,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및 수당 지원 기준을 현실화 함.
 -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맞벌이 지원, 예방접종 등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을 현실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중산층 취업모는 대부분 정책대상에서 소외됨. 전액지원이라고 하지만 부모들의 특히 유아의 경우 단가 자체가 낮으며, 추가 비용이 많기 때문에 부모들의 지원을 받는 부모조차도

체감도는 매우 낮음.

- 맞벌이 지원 강화가 필요함.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양육비는 많이 지출하지만 양육비의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별 차이가 없음.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총양육비가 21~29만원 정도 많이 지출함.
- 영유아 예방접종비도 정부가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만, 적용되는 항목이나 제공 기관이 제한되어 있고, 보건소는 취업모가 이용하기 쉽지 않음.
- 취약계층 지원 각종 수당을 현실화 함. 특히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5만원에 불과함.
- 장기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보편적 현금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아동수당은 아동연령, 지원금액, 출생순위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 최저 수준으로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미만의 저소득층 양육비를 자녀 2인가정을 기준으로 1인 비용을 추정하여도 58만원 수준임. 이를 고려하면 15~20만원이 목표액이 되겠으나 우선 10만원부터 실시함.
 - 이러한 제도는 부모의 비용체감도와 조기투자의 편익을 감안하여 영아부터 점차 확대 적용함.
 - 출생순위는 첫째 자녀부터 적용함. 자녀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더불어 첫 아이를 기르는 젊은 부모들의 부담과 민감성을 고려하여야 함. 한자녀 부모는 추가 출산 결정으로 출산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상이기도 함.
 - 다자녀 가구의 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을 고려하여 자녀수를 감안함.
 - 제도 도입 시 서비스 비용 지원과는 분리하여야 하고, 기존 양육수당이나 조세 지원은 재검토를 요함.
- 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양육비용을 추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미국이나 호주는 일찍부터 자녀 양육비 산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일본 정부도 저출산 대책인 아동수당 확대를 배경으로 영유아 양육비용을 추정하였음.
 - 우리나라도 향후 미혼부 양육비 청구권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근거가 필요함.

국가수준의 유치원평가 체계화 방안

장명립, 김진경, 박수연

1. 연구 목적 및 방법

- 2011년도부터 추진될 제 2주기 유치원 평가 지표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치원 평가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평가 계획 및 결과 자료를 수합·분석하고, 1주기 유치원 평가위원 델파이 조사를 통해 유치원 평가에 대한 의견 및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음.
- 또한 1주기 유치원 평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치원 평가의 발전적 추진 방향, 추진 체계 및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는 유치원 평가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2. 제 1주기 유치원 평가 결과 분석

- 제 1주기 유치원 평가지표의 적절성 분석
 - 평가지표의 양호도 분석
 - 문항 타당도는 평가문항 점수와 그 문항이 속한 영역 점수간의 상관계수(r)를 산출하여 검토하였으며. 학부모 만족도 점수를 제외한 27개 평가문항이 해당 영역과 정적 상관관계 있음.
 - 지표별 문항 곤란도는 5점 기준 3.33점에서 4.88점으로, 운영관리 영역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건강·안전, 교육환경, 교육과정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영역에서 80%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지표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
 - 평가지표의 신뢰도 분석
 - 문항 내적합치도는 전체 27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91, 평가문항들이 전

반적으로 동질적이고, 영역별 Cronbach α 는 .71에서 .86까지의 분포를 나타내어 영역별 문항의 신뢰도가 적합한 수준임.

3. 유치원 평가 지표 및 운영체계에 대한 요구 분석¹⁾

- 평가영역 및 지표에 대해서는 중복지표 통폐합, 평가지표 명료화, 기관유형별 지표 차별화 등이 주를 이루었고, 서류 간소화나 가중치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도 있어, 평가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및 구체화가 필요함.
- 평가지표 가중치에 대한 의견은 가중치가 필요하며, 가중치가 필요한 이유는 지표 내용의 비중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해야 함.
- 유치원 평가지표 유형화(설립유형별, 기관규모, 지역별)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 기관 규모별로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 설립유형별 차별화에 대해서는 필요없다는 의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전반적인 평가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척도가 포함된 평가지침 및 매뉴얼과 평가준비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서면평가에 대한 의견으로 현장 방문 평가시 참고 및 비교 검토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방문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사전연수 및 워크숍을 강화해야 함.
- 평가위원에 자격으로는 현장경력이 있는 유아교육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일정기간의 연수가 필요함.
-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74%, 평가 초기이므로 결과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서열화 및 과잉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등의 이유 제시, 따라서 평가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함.

1) 제 1주기 평가지표의 적절성 분석과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및 심층면담 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평가 개선 협의체와의 합동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 2주기 평가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시사점 도출

-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의 객관성이 부족, 진솔한 응답확보가 어려우며, 자료의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 학부모 만족도 조사 삭제 또는 개선이 필요함.
- 유치원 평가와 컨설팅의 연계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됨. 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 평가 전문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함.

4. 국가수준의 유치원 평가 체계화 방안

가. 유치원 평가 지표

□ 평가 지표 및 요소

- 기존 공통지표의 4개 영역(교육과정, 교육환경, 건강·안전, 운영관리 영역)은 유지하고 중복되었던 문항과 유사지표를 통폐합하여 총 14개 지표로 정리함. 단, 중일반 지표를 운영관리 영역의 기본 지표로 포함함.

〈표 1〉 제 2주기 유치원평가 공통지표 및 요소(안)

평가영역	평가 지표
1. 교육과정	1. 교육목표 및 계획 수립의 적절성
	2. 일과 운영의 적절성
	3. 교수-학습 방법의 적합성
	4. 교육 평가의 적절성
2. 교육환경	5. 실내·외 교육환경의 적합성
	6. 교재·교구의 적합성
3. 건강·안전	7. 건강관리 및 지도의 적절성
	8. 영양관리 및 지도의 적절성
	9. 안전관리 및 지도의 적절성
4. 운영관리	10. 교직원 인사 및 복지의 적절성
	11. 예산 편성 및 운영합리성
	12.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의 적절성
	13. 교원의 전문성
	14. 종일제 운영의 적절성

- 이상과 같이 지표를 14개로 정리하고, 각 지표별로는 2-4개의 평가요소 포함함.
 - 가장 지적사항이 많았던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객관적인 대상 선정 및 시행 방법상의 부적합성 때문에 삭제하였음.
- 평가 지표 가중치 및 유형화
 - 가중치 부여
 - 각 지표별로 동일하게 하여 5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하되, 교육과정 영역의 4개 지표와 교육환경 영역의 2개 지표 총 6개 지표에 대해 두 배의 가중치 부여
 - 유치원평가 14개 지표 총 점수는 100점(5점×8개 지표 + 10점×6개 지표)이 됨. 단, 가중치 부여 지표 배점은 기존의 10점, 8점, 6점, 4점, 2점 5단계로 하기 보다는 10점, 9점, 8점 등 10단계로 점수 부여
 - 공사립별, 규모별 유형화함.
 - 유형별로 지표는 동일하되, 공·사립간 근본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일부 지표에 대하여 5점 척도 단일 점수로 처리하여 점수 편차를 줄이고,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공립과 사립유치원에 다르게 부여할 수 있음.
 - 규모별로는 원감이 부재한 1-2학년 병설유치원의 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병설공립유치원에 대한 평가지표에서는 공립유치원이 이미 갖추고 있거나 교사의 역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닌 교직원관리 지표와 예·결산 관리 지표는 평가에서 삭제해 주는 것이 타당함.

나. 유치원 평가 추진 방안

- 평가절차
 - 평가절차는 제 1주기 평가와 같이, 자체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모두 포함함.
 - 자체평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척도를 제공하여 해당 평가 지표와 요소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 문서작성 준비 지양, 지표별 자체 점검을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매뉴얼 제공과 함께 심화된 사전 설명회 개최가 필수
 - 서면평가는 평가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서류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에

한해서만 서면평가를 실시함. 단, 이는 사전에 해당 유치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평가 시 참고용이므로 별도의 점수 부여는 불필요

- 현장방문평가는 제 1주기 평가 일정과 같이 한 유치원에 1일 5-6시간을 소요함.
 - 방문일자는 대상 유치원과 방문 날짜를 협의해서 확정하고, 수업 관찰 역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과 평가팀간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서류나 관찰 외에 당일 유치원 교사들과의 면담시간을 충분히 책정할 필요가 있음. 즉, 중앙 정부에서 제공하는 유치원평가 지침에 근거하되, 실제 유치원평가를 시행하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현장평가 일정을 조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함.

□ 평가위원 선정 및 운영

- 먼저 평가위원의 자격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수 및 현장교원으로 유치원 현장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기본으로 함.
 - 특히,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관련 연구, 전문직, 교수, 현장 교원 등의 경력을 최소한 10년 이상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평가위원회나 평가팀 구성시에는 학계 전문가와 유치원 현장 관계자를 균형 있게 구성토록 함.
 - 또한, 일부 별도 세부 분야의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지표(교직원 인사 및 복지, 예산 편성 및 운영, 영양관리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인력이 분리하여 일괄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함. 이는 서면으로도 가능할 것임.
- 평가위원 선정 방법은 초빙이나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청의 선정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향후 제 2주기 평가부터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하기 본다는 연중 실시하게 될 평가에 대비하여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평가단의 평가위원 수는 팀당 3인이 바람직함.
- 평가위원들에게는 가능한 한 평가 척도와 점수 부여에 대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구체적인 연수와 워크숍이 필수적임.
 - 평가 지표 및 요소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집중 연수해야 함.
 - 평가 보고서의 작성 및 기록 방법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모의평가 워크숍을 거쳐야 하며, 그 외에도 평가위원으로서의 태도 및 상담 방법도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위원 연수 방법은 1박 2일(약 20시간) 정도의 집합 연수 형태가 좋으며, 연수 전담기관을 두고 평가위원 연수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단, 평가의 총괄적 진행과 평가위원 연수를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는 16개 시·도별로 상황과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임.

□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필요성과 그 이유로는 유치원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제 1주기 평가 결과를 기초로 제 2주기 평가 준비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임.
 - 그 외에도 유치원 평가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수한 유치원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겠음.
 - 한편,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로는 서열과, 과잉 경쟁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 많으며, 제 1주기 평가에서는 당초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향후 유치원평가 결과는 단계적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활용할 필요 있음.
 - 즉, 1차적으로는 해당 유치원에 평가결과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유치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를 유치원 컨설팅과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치원평가 결과가 보다 실효성있게 활용되도록 하고, 유치원 평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정책적 제언

- 첫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수합·분석하여 제 2주기 평가 추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역사적인 제 1주기 유치원평가를 종료한 현 시점에서 16개 시·도별로 유치원 평가를 시행하면서 어떠한 어려운 점과 성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이후 유치원평가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6개 시·도 평가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원평가 개선 방안 모색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제 2주기 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충실한 제 2주기 유치원 평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 보다 구체적인 제 2주기 유치원평가 편람과 매뉴얼이 개발·보급되어야 함.
 -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편람과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 이는 각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각 지표별로 어떠한 상황과 특성을 보일 때, 또한 어떠한 경우에 5점을 부여해야 하는지, 또는 3점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평가지표의 축소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14개 지표로 축소하는 평가지표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이에 이후 본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척도와 평가점수 부여 기준이 포함된 편람은 물론, 자체평가부터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된 매뉴얼의 개발·보급이 필요함.
- 셋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전문직, 평가위원장 및 평가팀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연수가 실시되어야 함.
 - 현행 중앙에서의 공통평가지표와 전국적으로 공유해야 할 최소한의 평가 지침 제공 외에, 평가 편람과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보급과 16개 시·도교육청의 담당관과 대표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연수를 개최하여 제 2주기 평가의 취지와 추진 방향, 개선된 지표의 특성 및 세부 개선 사항, 지표별 척도화와 점수 부여 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전국적으로 평가 참여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평가 설명회 등의 연수
 - 워크숍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치원평가 안내 자료가 개발·보급되어야 함.
 - 제 1주기 평가에서는 16개 시·도별로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는 물론 평가 참여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매우 다른 방식의 연수와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이에 따라 각 시·도별로 평가의 절차나, 배점 방식, 평가보고서 작성 방식, 평가결과 피드백 방법 등에서 매우 상이한 점이 많았음.
 - 모든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함께 공유하거나 또는 매우 동일하게 지침으로 삼아야 할 공통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 안내 자료의 개발·보급이 요구됨.
 - 자료의 형태는 파워포인트자료, 동영상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안내 자료를

각 시·도의 연수와 설명회시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사립유치원 평가 결과 데이터까지 포함된 DB 자료를 이용한 제 1주기 유치원 평가지표의 통계적 타당성 검증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2010년 사립유치원 평가 지연에 따라 반영되지 못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평가지표 문항의 통계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유치원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필수 평가 서류만을 공식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제 2주기 유치원평가에서는 공통지표의 편람 및 매뉴얼 개발시, 전국 공통으로 일관성 있게 제공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용이한 양식을 함께 개발·보급해 줄 필요가 있음.
 - 향후 유치원에도 도입될 예정인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와 연계하여 해당 제도에서 보급할 매뉴얼의 양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일곱째, 유치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 평가와 연계한 유치원 컨설팅이 활성화되어야 함.
 - 유치원컨설팅은 유치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유치원의 교육력 제고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유치원 평가와 연계한 종합적 컨설팅을 통해 유치원 운영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유치원의 교육활동 및 운영에 대한 총체적 안목 형성에 도움이 되며, 유치원 평가의 지표에 따라 진단해 봄으로써 다음 유치원 평가에 대비한 전문적 지원 활동의 의미도 지니게 될 것임.

가구유형별 육아지원 요구와 육아지원방안 연구

: 맞벌이·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이윤진, 이정원, 김문정, 황은숙

1. 연구 목적 및 내용

가. 연구목적

-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적인 가구유형은 감소하는 반면, 한부모 및 조손가구 또는 1인 가구 등의 다양한 가구유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에 발맞춰 가구유형별 세분화된 육아지원정책의 수립·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모두 일터에서 일하거나, 부모 중 일방이 없어서 육아지원이 특히 필요한 맞벌이가구와 한부모가구(조손가구 포함)의 육아실태 및 애로점을 조사하고 가구유형별 구체적인 육아지원방안을 모색함.

나. 연구내용

- 맞벌이가구는 일반맞벌이가구와 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로 구분하여 두 유형 맞벌이 가구의 일반적 특성, 육아실태, 육아의 어려운 점 등을 비교·분석
 - 취업모가 직장을 그만 두는 가장 큰 이유로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마땅치 않아서'가 46.9%로 가장 많았음. 그러나 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 가구는 '믿고 맡길 수가 있어서'가 52.1%로 가장 많이 응답함(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직장보육시설이 맞벌이가구의 육아지원에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의 육아실태를 파악하여 일반맞벌이 가구의 육아지원방안 도출의 준거로서 활용하고자 조사를 실시함.
- 한부모가구(조손가구 포함)의 일반적 특성과 육아실태, 육아의 어려움 점 등을 조사하되 가구주 성별에 따른 차이점에 주목함. 특히, 국내유일의 부자시설 '아담채'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한부모가구의 육아현황을 조사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는 남성한부모가구의 육아지원방안 모색에 주안점을 둠.

- 여성한부모가구의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05년도에 17.3% 증가한 반면, 남성한부모가구는 28% 증가하여(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년, 2005년) 남성한부모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지원이 필요함.

2. 연구 방법과 용어정의

- 문헌조사, 설문조사, 사례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함. 주 연구방법인 설문조사와 사례조사의 지역, 표집방법,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설문조사 표집 방법
 - 일반맞벌이가구(800사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5개 지역 거주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이나 야간의 마트 부근에서 조사원이 해당 대상을 임의표집하여, 대면면접조사 실시
 - ※ 맞벌이 가구란 본 연구 설문조사 실시 기간(2010년 8월 11일~8월 31일 21일간)동안 남편과 부인 모두가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가구 중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 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200사례, 최종분석은 199사례)
 - 직장보육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96개), 경기(88개) 지역으로 한정하여 모아맘보육경영연구소(직장보육시설 경영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여성(모)이 자기기입방식으로 실시(직장보육시설 10곳 선정, 한 곳당 20사례 응답)
 - 한부모가구(300사례; 여성한부모가구 291사례, 남성한부모가구 49사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5개 지역 거주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한부모가구 자조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하여 조사원이 대상을 임의표집하여 대면면접조사 실시
 - ※ 한부모 가구: 법적 정의를 차용하여 부모 중 어느 쪽이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해 모자·부자로 이루어진 가구 중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 부자시설 거주 남성한부모가구(11사례)
 - 남성한부모가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유일의 부자시설 ‘아담채’ 거주자 20가구 중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가구

□ 사례조사

- 영유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4사례와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구 4사례 등 총 8사례를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면담방식으로 실시하되, 육아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함.

※ 조손가구: 법적 정의와는 달리 부모가 ‘건강하게’ 생존해 있더라도, 이혼이나 별거로 조부모가 영유아 손자녀의 육아를 전담해서 키우는 가구

3. 연구 결과

□ 맞벌이가구

- 일반맞벌이가구(이하, 일반가구)보다 직장보육시설이용 맞벌이가구(이하, 직장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체로 높음.
 - 일반가구의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하가 42.3%를 차지하는 반면, 직장가구의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하 7.0%에 불과하며, 일반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부 257만원, 모 157만원에 비해 직장가구는 월평균 부 312만원, 모 255만원으로 가구소득도 더 높음.
 - 일반과 직장가구 모두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 유형이 84.5%, 76.9%로 대부분 차지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맞벌이를 한다고 응답함.
- 일반가구의 부모출근 후 주양육자는 없음(40.0%)>조부모(39.5%)>손위형제(9.9%)로 나타남. 그러나 영아자녀는 조부모가 주양육자인 경우가 63.7%, 없음이 24.5% 순으로 나타나, 자녀연령이 주양육자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확인됨.
 - 81.3%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함. 이용기관은 민간어린이집(41.1%)>사립유치원(27.2%)>국공립어린이집(17.8%)>국공립유치원(8.8%)>가정어린이집(5.4%)>학원(2.3%)으로, 68.3%가 보육료·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이용함. 월평균 보육료·교육비는 30.1만원. 절반 이상(55.5%)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비용지원은 없다고 응답함.
- 직장보육시설 이용시기는 평균 자녀연령 28.6개월, 총 이용기간은 16.3개월, 이용시간은 오전 8시대에서 오후 6시대까지가 가장 많으며, 평균 보육료는 26.7만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비용지원은 없다고 70.5%로 조사됨.
- 육아휴직제도 이용에서 일반가구는 응답자의 약 19%만이 사용했으며, 직장가

구는 약 42%가 이용함. 또한, 직장가구의 남편이 자녀양육 참여도가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오는 등 직장가구의 육아현황이 일반가구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드러남. 핵가족 형태에서 자녀양육을 부모가 전적으로 해결하는 일반가구는 기관이용시 비싼 비용부담, 부모 퇴근시까지 자녀를 돌봐줄 대리양육자의 부재, 배우자의 늦은 귀가로 인한 자녀양육의 낮은 참여도, 육아휴직의 미활용,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등 다차원인 문제들이 중첩되어 육아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부모가구

- 한부모 가구주 학력은 고졸이하가 약 60%, 고용상태는 계약직(41.4%)>정규직(38.9%)>일용직(5.5%), 월평균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70%이상을 차지하여, 낮은 학력,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신분 등 저소득 가구의 전형적인 특성을 지님. 한부모가구 형성이유는 이혼이 74.3%로 압도적으로 많음.
 - 부자시설 설문조사에서도 총 11명 응답자 중 고졸 8명, 정규직 0명, 월평균 소득은 약 101만원, 이혼이 9명임. 부자시설에 입소한 가장 큰 이유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7명으로 가장 많음.
- 보육시설과 유치원 미이용이 10.3%. 이용기관은 유치원(22.0%)보다는 보육시설(61.0%)을 더 많이 이용하며, 비용은 월평균 14.4만원임.
- 자녀의 주양육자는 여성한부모의 경우 직업이 일용직 또는 무직,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 양육이 가장 많았고, 남성한부모의 경우에는 확대가족, 소득 150만원 이상에서 조부모 양육이 가장 많았음. 조손가구 4사례 모두 남성한부모 가구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한부모가구의 조부모 양육은 결국 조손가구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음.
- 여성한부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남성한부모의 경우는 양부모역할 동시 수행이 현재 직면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함.

4. 정책방안

□ 근로가구(맞벌이, 일하는 한부모가구주)에 초점을 맞춘 육아지원정책 수립·추진

- 국공립 보육시설·유치원 우선 입소시 부모의 '근로여부'를 가장 중시
 - 수요가 많은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입소(원)에서 가구소득보다는 부

모의 '근로여부'를 더 중시하여 우선 입소자 결정할 것을 제안

-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가장 희망하는 육아지원정책으로 꼽음) 시급
 - 2010년부터 신설된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대상 범위와 비용 확대에 주력
- 직장(내)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 확충 활성화
 - 본 조사에서 직장보육시설은 한부모가구가 가장 희망하는 육아지원정책임. 그러나 저소득 한부모 가구주의 일터는 대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체이거나 설치하기가 여의치 않은 영세 중소기업이 많으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보다는 직장내 다양한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예: 직장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또는 소규모보육시설 설치, 컨소시엄 방식 등
 - 모자·부자보호시설 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설치 유도
 - 이처럼 한부모가구 지원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복지급여정책(welfare)에서 근로유인정책(workfare)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 아동양육수당비 인상과 대상 확대, 한부모가구의 생계비·의료비 지원의 복지급여정책 추진 필요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업체 의무이행 독려, 설치기준 완화
- 기존 육아지원정책·제도의 실질적 활용 증진 또는 지원서비스 간 유기적 결합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의 시너지 효과 배가
 - 확대가족구조가 아닌 현대사회에서 육아지원은 기관지원 또는 가정내 돌봄 지원 등 일차원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음. 기관지원정책(보육시설)과 가정내 돌봄정책(아이돌보미사업)을 결합한 일종의 '패키지 육아지원서비스' 정책개발이 필요함.
 - 육아휴직제도의 실효화·의무화
- 가구유형별 부모교육과 자녀대상 프로그램 제공 및 대국민 홍보 실시
 -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건강가족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기존 인프라 간 연계를 통해 가구유형에 따른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예컨대 맞벌이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한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 시간이 부족해서 기관차원 부모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위해, 그리고 반편견교육 차원에서도 TV홍보 방식으로 부모교육 제공
 - ※ 예: 남성한부모 대상으로 '엄마역할은 이렇게 하세요' 등의 TV 홍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김은영, 문무경, 김문희, 박수연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외국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과 사례 고찰, 정책 전달자인 정부 및 단체 관계자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기초로 행정체계 측면과 내용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다문화 가정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제도 및 정책 분석
 - 국외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및 사례 분석
 -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 및 인식 분석
 -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제안
- 다문화 가정의 유형은 크게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함.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집단 및 개인 면담
- 조사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3. 연구의 배경

- ‘다문화가족’과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정부부처의 정책이나 진행되는 연구에 따라서 혼용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가정이라는 용어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됨.
- 연령별, 부모 국적별, 거주지역별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현황과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돌봐주는 기관과 인력을 살펴봄.
-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및 부모 실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추진체계,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 내용을 정리함.
- 행정체계 측면에서는 다른 대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필요성과 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을 제시함.
- 지원내용 측면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외국인 부모 대상 한국어 지도 강화, 다문화 가정 부모 대상의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교사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제시함.

4. 국내 다문화 관련 제도 및 영유아 지원 정책

- 다문화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 관련 국제협약 중 다문화 지원 관련 내용을 고찰함.
- 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의 배경으로 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을 살펴보고, 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봄.
- 지방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과 예산을 살펴보고,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을 부처와 대상별로 분석함.
- 행정체계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 분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일부 사업들이 그 대상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과 지역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

아 지원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여 다양한 사업을 연계할 필요를 제시함.

- 지원내용 측면에서 그 동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민자 정착과 지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많은 사업들이 영유아들을 제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함.

5. 국외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및 사례

-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베를린 주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취원율을 중심으로 고찰함.
- 유아 언어교육 지원, 이민자 부모 / 부모-유아 연계 지원 프로그램, 이민자 학부모 등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한 사례를 제시함.
- 영유아들을 위한 특별 지원과 기타 취약계층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지원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지원 대상(target group)별 지원프로그램(tailored programmes)을 명확하게 하는 것,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정책 지원은 가정 및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함.

6. 국내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 및 인식

-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 서비스 전달 인력인 지도사와 희망유아교육사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제시함.
-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에 대한 인식을 행정체계에 대한 인식, 지원내용에 대한 인식, 정책 지원으로 나누어 설문조사 결과와 면담내용 분석 결과를 제시함.

- 행정체계 측면에서는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여전히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쌍방적인 의사소통, 다문화 지원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와 협력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들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정책 실행에 적합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부모교육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 다문화 가정에게 무조건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함을 제시함.
- 지원 내용 측면에서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 대상으로는 보육·교육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어머니와의 유대감 및 정체성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 부모 대상 한국어교육 및 가족관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다문화 영유아 및 일반 영유아와 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사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

7.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가. 기본 방향

-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지원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다문화 가정과 함께 더불어 가는 지원이 되어야 함.
-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지원하되, 다문화 가정 영유아만 따로 떼어놓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지원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기초하여 중복지원을 줄이고 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
- 정부주도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지역사회와의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함.

나. 세부 추진 방안

□ 행정체계의 효율화 방안

- 지원 창구의 일원화 및 포털사이트 구축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
- 지원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지원 인력 및 재정 확보
- 다른 지원 체제와의 연계 및 협력

□ 지원내용의 효율화 방안

- 영유아 발달을 위한 포괄적 지원
 -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직접 지원
 - 다문화 가정 학부모에 대한 지원
 - 유치원·보육시설 교원 및 일반인에 대한 지원
- 교 간 및 지역 간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모범 사례 공유
-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정책 우선순위의 결정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부여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

김은설, 최윤경, 조혜주, 김선화

1. 연구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청소년과 대학생, 미혼 성인,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 부모교육의 현황, 내용, 참여 등 실태를 조사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변인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점, 요구 등을 파악하여 예비부모교육을 내실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구체적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예비부모 교육의 개념 및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통해 예비부모 교육 연구의 방향과 의의를 명료화 함.
 - 둘째, 국내외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와 운영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각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개선 사항을 검토함.
 - 셋째, 현재 우리나라 예비부모 교육의 실태와 요구도 파악을 위해 청소년 및 대학생, 미혼 성인 등의 교육 참여의 실태와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의견을 조사함.
 - 넷째,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연령별, 성별 구분에 의한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고교 및 대학, 성인 교육과정내 적용 등 예비부모 교육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 고등학교 교과서를 포함하여, 국내·외 예비부모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수집·분석하고, 선행연구를 고찰함.
-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예: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석 경험자(예: 교양과정 수강 대학생, 고등학생), 고등학교 가정·기술 교사, 고등학생/대학

생 등 관련자 간담회를 갖고, 예비부모교육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 예비부모교육 대상자 및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주체별·연령별·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전국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국 6개권역 93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 등 학교내외의 예비부모교육 경험, 만족도, 의견, 가치관 면접 조사함.
 - 전국 6개권역 770명의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교내외의 예비부모교육 경험과 만족도 평가, 의견, 부모됨 및 결혼·가족에 대한 가치관면접 조사함.
 - 전국 16개 시도 1000개의 고등학교를 무선표집하여 각 학교 기술·가정 교과 담당 교사들에게 현재 교과 수업 현황과 고등학생에 대한 예비부모교육의 개선 의견 등을 우편 조사하여, 총 269명의 교사의 응답을 회수함.
 - 남녀 성인의 예비부모교육 수강 경험에 대한 실태 및 의견조사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10곳과 종교기관 3곳의 예비부모교육의 수강생 237명을 대상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과거 예비부모교육의 경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설문 조사함.
 - 대학에서의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양강좌 개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총 373개 대학 전수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함.

3. 예비부모교육 실태

- 국내 예비부모교육의 현황을 학교, 정부, 사회단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문헌고찰, 관련자료 검색, 및 방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정부 지원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저출산 극복 사회운동, NGO 사회단체 및 육아지원기관의 교육활동, 종교기관, 그리고 기타 사설 상담기관과 문화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예비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충실도와 지속성 면에서 부족하여 일회성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임.
- ‘고등학교 시기’에 이루어지는 예비부모교육의 현황을 학교 내·외로 구분하여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고등학교 교사 등 4개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교과외 경험은 거의 전무함. 대학생의 77%, 성인의 10%가 고등학교 시기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연령별 예비부모교육에의 경험과 인식, 인지의 차이가 드러

남. 대학생의 경우 대학이후 교육을 받은 비율은 8.7% 이하, 대학교육에 의한 경우는 6.4%에 불과함.

- 대학생의 경우, 77.1%가 지금껏 예비부모교육을 배운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유경험 응답 대학생 중 97.9%가 고등학교에서, 8.3%가 대학, 1.3%가 군대에서 받았다고 응답, 매우 적은 비율의 대학생이 대학시기에 예비부모교육을 받고 있음. 4년제 대학의 약 53%가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교양필수로는 7.8% 대학이 개설하였고, 대학생의 8%정도만이 이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가 더 많았으며, 주로 교양선택과정(57.8%)을 통해 부모교육(38.3%), 결혼(20.0%) 관련 교과목을 듣는 것으로 조사됨. 수업내용으로는 부모역할 및 책임(64.1%), 현대가족의 이해 및 가족의 중요성(51.6%), 아동발달 지식(48.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90.3%가 강의방식을 통해 진행함.
- 성인의 경우, 현재 받고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교기관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외에 지금껏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10.0% (23사례)만이 있다고 응답, 고등학교 시기의 기술·가정 교과목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을 인식하지 않은 결과로 이해됨. 유경험자의 경우 예비부모교육을 국가/지자체 기관(38.1%), 직장내교육(28.6%), 대학교(23.8%), 사회교육/상담 기관(23.8%)에서 받은 것으로 응답됨.

4. 예비부모교육의 결혼과 부모됨에 대한 인식

-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모두 공통적으로 결혼과 자녀양육,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가운데, 여성이 출산과 육아의 고충을 더 인식하고 남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성차를 보임. 성인기의 차이가 가장 큼. 자녀양육은 어머니에게 더 적합하다는 등의 전통적 가치관 인식은 대체로 고등학생-대학생-성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 인식의 차이도 나타남. 자녀양육에의 국가책임론에 대한 인식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며, 성인의 경우가 가장 그러함.
 - 희망자녀수에 대해 고등학생 65.6%, 대학생 56.8%, 성인 53.4%로 '2명'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음.
 -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소양과 지식이 '따로 있다'는 응답은 고등학생 76.0%, 대학생 91.1%, 성인 88.8%로 좋은 부모가 되기위한 지식의 필요성 즉 예비부

모교육에의 필요성 인식이 높으며, 대학생의 경우가 가장 그러함. 좋은 부모가 되기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고등학생은 경제적 능력(34.5%)-타고난 성품(22.2%), 대학생은 양육가치관(31.9%)-양육지식 및 기술(28.2%), 성인은 양육가치관(56.9%) 순으로 나타나 연령별 인식의 차이가 흥미로움.

- 부모교육의 적정 시기에 대해 대학생은, '청소년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함.

5. 예비부모교육의 개선방향 모색: 인식 및 요구분석

- 고등학생과 교사, 대학생, 일반 성인의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와 흥미, 개선에의 요구의견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에 대해 대학생과 교사는 높은 비율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교육내용면에서도 예비부모교육이 좋은 부모가 되는 데 유익한 것으로 인식함.

- 예비부모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 교과수업'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교사들은 고등학교에서 교과목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이 대체로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보임.
-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의 확대 강화 방안으로 과목내 육아 관련 내용 분량의 확대와 시수 증가, 특강 실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배포를 주장함.
- 성인 대상 예비부모교육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접근성이 증대되고, 특히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성인들은 향후에도 교육받을 의사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임.

- '성인 대상' 예비부모교육은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센터 등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정규화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6. 예비부모교육의 내실화 방안 (제언)

- 국가수준에서 정책적으로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며, 예비부모교육을 장려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예비부모교육의 적기는 ‘고등학교’ 시기로, 학교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수업에서 충실이 이루어지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함.
- 고등학교 교과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시청각 자료를 풍부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양육 관련 실습이 권고되나, 실습수업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양한 교육매체의 활용을 통한 수업의 입체화 등 질제고에의 대안적 노력이 요구됨. 또한 남교사가 지도하는 남학생에 대해 유의하는 환경의 마련이 요구됨.
-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고등학교 시기는 임신과 출산, 피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며, 이를 통해 10대 임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예방적 교육과 함께, 부모됨에 대한 근본적인 충족감과 자녀의 의미 등 가치관 형성에 중점을 둔 출산친화적인 내용을 중시해야함.
- 대학생 시기는 보다 심화, 구체화된 예비부모교육이 가능한 시기임에도 대학생의 약8%만이 이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더 많은 강좌개설과 내용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대학생 시기의 예비부모교육 이수율 제고가 요구됨.
- 성인기 예비부모교육에의 ‘교육접근성’의 확대와 ‘홍보강화’가 필요함. 우선적으로 젊은 세대가 많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예비부모교육을 내실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예비부모교육에의 접근성과 정보이용율을 높여야 함.
 - 25세 이상 ~ 35세 미만의 성인의 경우, 지역센터 등 기관 중심의 직접 교육에 대한 선호와 효과성 인지가 높으므로, 정부 지원 센터나 교육청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가 요구됨.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은 예비부부교육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제한된 내용이므로, 국가의 주요 정책 사업인 ‘출산/육아 장려’를 고려하여 저출산극복 프로그램을 적극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만으로는 접근성이 충분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과정 및 강사에 대한 검증과 승인의 과정을 거쳐 지역내 대학/기업 등과 연계하여 정부 지원 하에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예비부모교육 인프라의 마련이 요구됨.
 - 성인기 예비부모교육 접근성 및 효과 제고를 위해, 학습자에게 동인(動因, motivation)을 부여의 제도화를 고려할만 함 (예: 예비부모교육 이수자에게 사회복지적 우대).

아동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욕구

-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심층분석 -

서문희·김은설·최윤경·김진경·최혜선·안재진·최진

1. 연구목적 및 내용

- 2009년도 보육·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보고서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들은 9개 주제로 나누어 심층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아동양육 및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보육·교육환경을 개선 정책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함.

2. 분석 결과

가. 소득수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 차이 분석

- 소득수준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 결정요인으로 작용함.
-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에서 모두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이용률도 높으며, 소득 4분위부터 유치원 이용이, 소득 7분위부터는 보육·교육유사기관 이용이 그 이전 소득계층과 차이있게 증가함.
- 소득은 가구당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4.5%의 설명력을 가짐.
 - 2004년에 비하여 개인당 비용이 영아는 약 3만3천원 가량 감소하였으나 유아는 3만8천원 가량이 증가하였음. 2004년보다 소득수준별 격차가 증가하였음.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서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시설을 일정부분 확대해야 함.

나. 취업모의 취업특성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 차이 분석

- 취업모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이 크고 정부 소득이 높고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불만율이 높았음.
 - 소득이 높은 취업모일수록 국공립시설 확충과 보육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보육비 지원확대와 양육비현금지원에 대한 희망이 큼.
- 소득이 낮고 근로시간이 길며 단순노무직일수록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함.
-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소득층 영아에 대한 가정내 육아지원 확대를 제안함. 상업지역 등 취업모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말 및 야간보육을 확충하고 대체교사 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 취약가정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 취약가정 영유아 자녀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은 개인양육지원과 사교육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기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취약가정 전체 평균 53.2%로 높으며, 조부모 26.2%, 유치원과 방문학습지 각 19.0%의 순으로 나타남.
-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비용에 있어서도 취약가정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6~13%대로 비취약가구에 비해서는 대체로 낮으나, 취약가정의 낮은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부담체감도는 높을 것으로 보임.
- 취약가정은 보육료·교육비비용 감면 비율이 높고, 이는 정부 보육료지원정책 만족도와 기관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녀양육과 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라. 보육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서비스 측정기준(SERVQUAL) 기준에 따라 분석한 보육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보 제공, 대응성, 안전성임.
 - 보육 서비스 품질 요인은 보육계획, 급·간 식단, 가정통신문 등(정보제공), 보육시설의 등·하원시간의 적절성(대응성), 평가인증 시설 여부와 운영위원회 구

성(안전성), 근거리에 위치한 양질의 보육시설(접근성)임.

– 보육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보 제공이며, 대응성과 안전성 순서임. 하지만, 접근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보육서비스 만족도에 신뢰성과 안전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 관련 정보를 더 많이 부모에게 제공하고 보육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 보육서비스 이용의 지속성과 정책 변화에 따른 이용 만족도 변화

- 2009년 대비 동일 보육시설 이용 비율은 66% 수준이며 다니던 보육시설을 옮기는 경우에도 이사, 접근성, 반 편성 등 물리적 이유가 대부분임.
- 보육시설 계속 이용 아동 부모의 만족도가 다른 보육시설·유치원으로 옮긴 부모 만족도보다 높으며, 이동에는 부모 참여 만족도와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줌.
- 보육정책에 대한 일반적 만족도는 감면 대상자의 만족 정도만 2.54점에서 2.61점으로 조금 높아졌고, 미지원자의 만족정도는 2.13점에서 1.92점으로 낮아졌음
 - 이는 2009년 7월 신규 감면 대상 확대 정책의 효과로 파악됨.
- 이용시설의 평가인증 여부별을 부모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 인식에 있는 항목은 교재교구 및 장비 하나로 나타나, 평가인증이 보육시설의 전반적 수준을 올리는 것으로 유추됨.

바.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보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서비스 이용에는 친조모 동거, 외조모 동거, 거주지역, 가구소득, 모연령, 모취업, 아동 출생순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 특히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은 가구원수, 자녀수, 아동성별 요인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비혈연 서비스 이용시간에 미치는 요인은 모연령, 모 근로시간이 유의함.
- 혈연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은 가구소득과 모 근로시간, 반일제 이상 기관이용이,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은 가구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남.
- 자녀 연령, 모취업 여부, 가구소득 등 지원대상을 면밀히 고려한 혈연 및 비혈연

비공식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사.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추가 출산 의사

-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이 추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수혜 자체보다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작용함.
 - － 한 자녀를 둔 경우,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는 비용 지원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비용 지원정책 만족도는 두 번째 자녀 추가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 특히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수혜가 이러한 인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일반적 만족도에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수혜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요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의 추진이 요구됨.

아.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및 비용 분석

-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은 점차 보편화, 저연령화 되고 있고, 부모는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아동의 교육비로 지출하려는 경향을 보임.
 - － 사교육 참여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미취학 아동 8만 5천원, 취학아동 32만 3천원으로 나타났으나, 미취학 아동의 반일제 이상 기관이용 비용을 고려하면 총비용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지원되는 금액만큼을 사교육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보임.
-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반일제 기관이용 여부, 모취업여부, 거주지역 규모, 월 가구소득, 자녀수와 출생순위, 아동연령임.
-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 영향요인은 반일제 기관이용 여부, 가구소득, 자녀수, 아동연령, 이용프로그램 수와 이용시간임.
- 부모교육을 통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사교육 남용의 위험성과 학습 이외의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한편, 부모들이 원하는 경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특기적성이 저렴한 비용으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 자녀수가 적을수록 학원, 개인, 그룹과외 지도를 선택하는 경향이고,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은 모두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이용률도 높음
-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이 낮을수록, 주택이 자가일수록 학원이용률이 높았음.
 - 고소득층 가구이며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학원을 더 많이 이용함.
-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참여 프로그램 수와 지불 비용이 많은 반면,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모 자녀인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방과후 자녀를 많은 시간 학원이나 개인, 그룹과외지도를 통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적은 자녀수를 출산해서 가장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추세를 읽을 수 있었음.
 - 유아기에서 갓 벗어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문제는 발달상으로 중요한 문제임. 학교가 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을 구성하여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보육을 책임지도록 지원해줄 정책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 맺는말

- 이 보고서는 9개의 주제를 독립된 논문 형식으로 구성, 작성하였음.
 - 분석결과 대체로 소득수준이 영유아 공식·비공식 서비스와 사교육, 초등학생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나 비용에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며, 취약계층이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비교적 높으나 정부의 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는 낮고 비용 지원정책에 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존재하지만 간접적이고 매우 미약함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정부정책은 정책이나 서비스 만족도로 반영되고 있음도 나타났음.
- 구체적 자료들은 앞으로 보육 정책 등 관련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함.

한국아동패널 2010

이정림, 이정원, 김진경, 송신영, 왕영희, 이예진, 신나리, 김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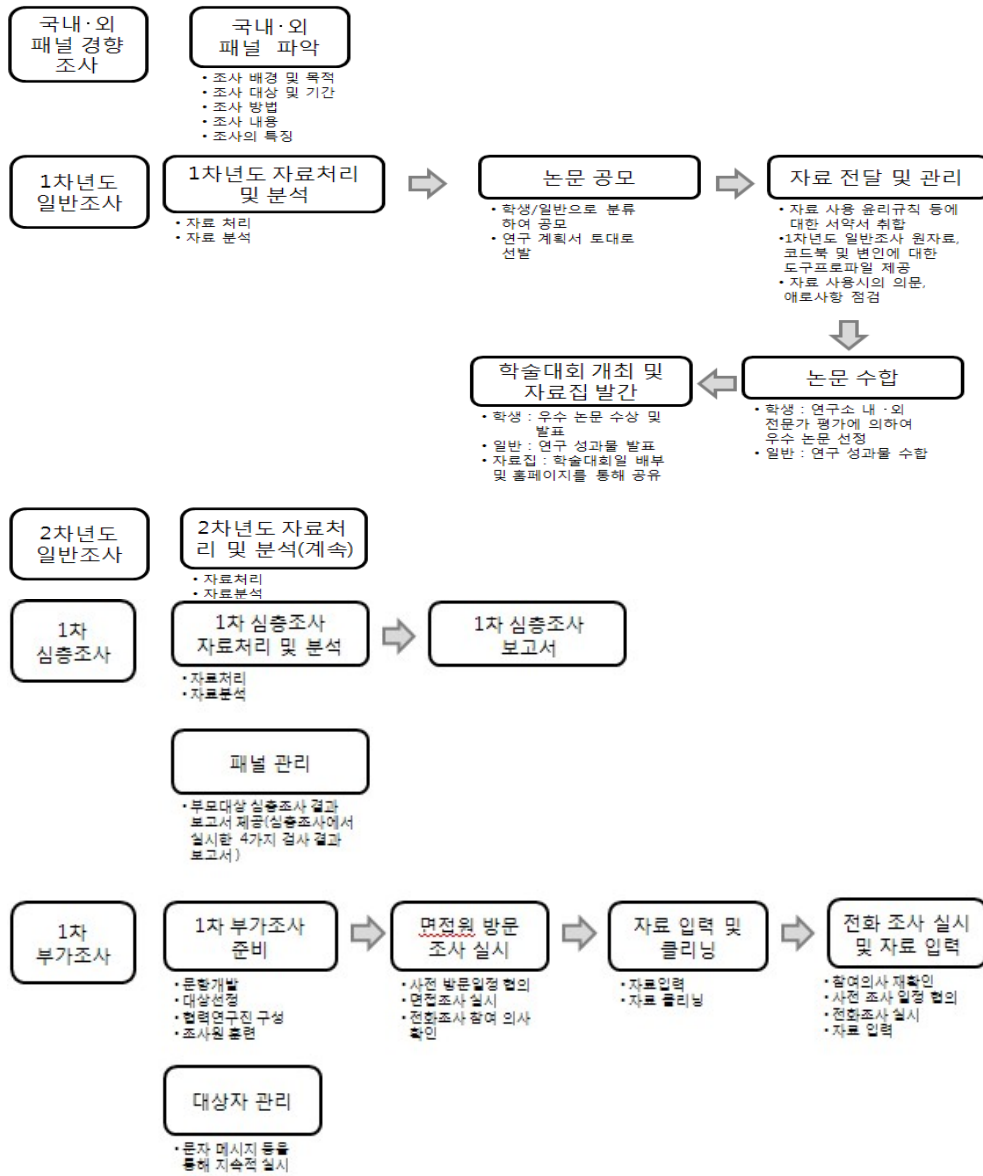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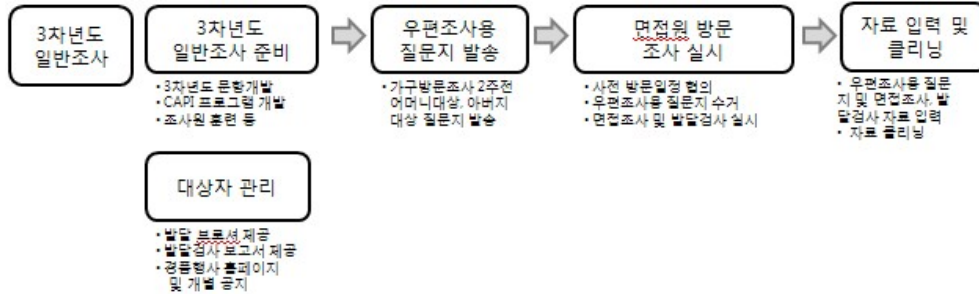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과 그를 둘러싼 환경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연구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의 생애초기부터 수행하는 국가수준의 대규모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은 단일 연령 집단의 횡단적인 자료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크게 세 가지 기대효과를 가짐.
 - 매년 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영유아 관련 국가 정책의 수립과 재정립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함.
 - 사회적·학술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연구를 활성화시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가정의 원활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 수립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
 - 국가수준의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논문공모사업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연구와 논문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향후 한국의 육아정책 발전에 귀중한 초석을 마련함.

나. 한국아동패널 2010의 연구 내용 및 방법

- 한국아동패널 2010의 전체적인 연구 흐름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요약됨.





[그림 1] 한국아동패널 2010의 연구 진행도

2. 2차년도 기초분석

가. 분석개요

- 한국아동패널 2차 조사의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발달 특성, 부모됨의 특성, 육아지원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주제별로 이루어짐.

나. 일반적 특성

- 아동특성
 - 아동 성별은 남아 51.5%, 여아 48.5%이며, 출생순위는 첫째아가 47.6%, 둘째아가 41.2%이고, 아동의 월령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14개월 36.3%, 13개월 24.4%, 15개월 23.4%임.
 - 아동의 체중은 평균 10.12kg이며, 키는 77.23cm, 두위는 46.02cm임.
- 부모특성
 - 부모 평균 연령은 어머니 32.91세, 아버지 35.56세이고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 어머니 69.7%, 아버지 72.2%이며, 고졸 미만은 1%미만임.
 - 아버지 98.1%, 어머니 31.3%가 취업 중이며, 취업모의 72.4%가 출산 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하였고, 15.3%가 출산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였으며, 12.3%가 휴직중임.

- 휴직 중인 어머니의 83.8%가 복귀할 예정이며, 7.1%는 복귀계획이 없음.

□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가구원 구성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가 88.2%, 3세대 가족이 7.8%임.
- 평균 월평균 가구 소득은 409.08만원이며, 지출에서 소비성 지출은 187.43만원, 비소비성 지출은 88.93만원으로 나타남.
- 거주하는 주택 형태는 아파트가 71.0%, 연립주택(빌라 포함) 12.2%, 단독주택 7.4 %이며, 소유 형태는 자가 42.5%, 전세 40.8%로 비슷하게 나타남.

□ 지역사회 특성

- 지역사회 내 보육시설, 유치원 및 학원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해 각각 16.3%, 30.3%, 30.9%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함. 공공여가 공간·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29.3%, 53.4%가 불편하다고 응답함.
- 지역사회의 치안과 안전사고에 대해 각각 14.3%, 21.4%가 위험하다고 인식함.
- 전반적인 육아적절성에 대해 좋지 않다는 응답이 17.3%임.

□ 위탁가구 특성

- 전체의 2.5%가 아동을 다른 가구에 위탁 중이라고 응답함.
- 위탁가구는 대부분 취업모 가구로 외조부/외조모 위탁이 52.4%, 친조부/친조모 위탁이 41.8%로 비슷하게 이용함.
- 1차년도 조사 이후 위탁을 새롭게 시작한 위탁가구는 57.9%이며, 지속적으로 이용시 1차년도와 동일한 가구 이용은 37.3%, 변경된 경우 4.8%로 나타남.

다. 아동발달 특성

- K-ASQ 검사 결과 '위험발달군'에 속하는 경우는 대근육 운동영역 5.4%, 문제 해결영역 2.6%, 소근육 운동영역 2.1%, 개인-사회성영역 2%, 의사소통영역 1.2%로 나타남.
- K-ASQ 검사 결과 '의심발달군'에 속하는 경우는 소근육 운동영역 15.1%, 문제 해결 영역 12.4%, 대근육 운동영역 10.7%, 개인-사회성 영역 7.8%임.
- Denver II 검사 결과 전체 아동의 74.2%가 정상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25.8%가 의심스런 발달임.

라. 부모됨의 특성

- 부모됨
 - 전체 35.7%가 추가 출산계획이 있으며, 53.6%는 추가 출산계획 없음.
 - 추가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의 이유는 교육비용 27.4%, 계획한 수의 자녀 출산 24.7%임.
 - 부모가 갖는 자녀가치는 부모 모두 정서적 가치에 더 의미를 부여함.
- 어머니 특성
 - 어머니의 22.1%는 경도/중등도, 5.4%는 중도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함.
- 부부관계
 - 결혼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아내는 평균 15.50점, 남편은 17.16점으로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 부부갈등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아내는 평균 16.19점, 남편은 15.93점으로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의 정도가 더 심각함.
- 양육특성
 - 부모의 자녀기대에 대한 항목별 응답에서는 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 이타심, 금전적 성공 순으로 나타남.
 - 부모의 책임에 대해 어머니의 48.2%, 아버지의 53.2%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응답함.
 -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모 모두 '예의바른 생활습관', '책임감',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순으로 나타남.

마. 육아지원 관련 특성

-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 출생 4개월 이후 낮 시간동안 주로 부모가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개인대리양육, 보육시설과 같은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조사시 전체 응답자의 27.7%가 개인대리양육자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서비스 형태는 개인대리양육자 60.7%, 보육시설 36.3%, 두 가지 병행이 3.1%임.
- 개인대리양육
 - 개인대리양육자는 외할머니 46.2%, 친할머니 34.3%로 조부모 비율이 높음.

- 대리양육자에게 낮 시간에 아이만 맡기는 형태가 32.5%,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9.0%이며, 주중 5일간 이용이 63.0%로 가장 많음.
 - 개인대리양육자 이용비용은 정기적 현금지불이 89.4%, 지불 안함 10.1%이며, 지불할 경우의 평균 비용은 61.37만원임.
- 보육시설
- 보육시설 이용 이유는 개인대리양육자 고용 비용 부담이 31.8%, 교육적 도움이 25.3%로 응답됨.
 - 이용 중인 보육시설 유형은 가정보육시설이 63.7%, 민간개인이 30.5%이며, 57.0%가 평가인증 시설이며, 41.2%가 미인증, 1.7%가 인증 취소 시설임.
 - 주 5일 이용이 85.7%로 하루 평균 8.76시간임.
 - 보육시설 이용비용은 평균 28.85만원이며, 38.1%가 일부 감면, 28.4%가 전액 면제 받고 있음.
 - 보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의 이유로는 두 자녀 이상 지원 34.3%, 차등 보육료 지원 33.4%, 기초생활수급 13.2%임.
- 육아지원서비스 외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 참여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16.4%로, 평균 1.25개를 이용함.
 -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통합 프로그램이 36.8%, 감각·조작 프로그램은 31.8%임.
 - 프로그램은 월 평균 4.98회, 회당 48.97시간 진행되며, 62.1%가 사설 문화 센터에서 이용하며, 평균 이용비용은 6.19만원임.
-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육아지원 기관 및 학원 시설 등의 이용 계획
- 2세에서 3세까지는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러한 비율은 아동의 성장에 맞추어 점차 감소함.
 - 이용하는 경우 5세까지는 보육시설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5세부터 점진적으로 유치원을 이용할 것이라는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 육아 지원 정책 특성
- 바람직한 육아지원정책 방향은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모두라는 응답이 52.8%임.
 -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의 필요성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여성의 출산휴가, 보육비지원, 여성의 육아휴직, 직장 보육 순으로 점수가 높았음.
 - 국가에서 보육시설 무상 지원 시 추가적으로 자녀 출산을 계획하겠다는 응답

은 66.6%이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2%임.

-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용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불할 경우의 자녀 출산을 계획하겠다는 응답은 63.4%이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8.2%였고, 희망 지원 비용은 30만원 이상이 50.5%로 나타남.

3. 1차 심층조사

- 1차 심층조사 자료로서 구축된 206가구의 아동특성(발달, 애착, 기질 변인)과 어머니 특성(성격 변인)을 대상자의 1차년도 일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연구의 제목은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1차 심층조사 및 1차년도 일반조사 활용 연구 주제

주제	주 활용 자료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영아의 인지발달 간 구조모형 분석	심층조사
애착유형에 따른 영아의 인지발달	심층조사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영아의 애착안정성	심층조사, 일반조사
한국과 미국 영아의 기질 구조 비교: ECBQ 타당화를 중심으로	심층조사
영아의 기질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	심층조사
인생초기 경험과 영아기 아동의 애착과의 관계 : 임신기 및 출산 시 변인을 중심으로	심층조사, 일반조사

4.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 2009년도에 구축된 1차년도 일반조사를 활용하여 2010년 10월 29일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실시함.
- 학술대회는 총 11주제와 대학원생 논문 수상작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구분은 <표 2>와 같음.

〈표 2〉 학술대회 구성

Session	구분	
Session 1	1 주제	육아정책과 만족도
	2 주제	자녀양육행동
	3 주제	기질과 영아발달
	4 주제	자녀 계획
Session 2	1 주제	어머니 변인 및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유형
	2 주제	자녀 양육 스트레스
	3 주제	영아 발달과 관련 변인
	4 주제	후속 출산 계획
Session 3	1 주제	어머니의 취업
	2 주제	부부관계
	3 주제	영아 발달 특성
	4 주제	대학원생 논문공모 수상작 발표

5. 향후 추진 계획

- 2011년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3차년도 자료 구축 및 기초 분석
 - 2차년도 자료 처리 및 1·2차년도 종단자료 처리
 - 1차년도 자료 공개
 - 4차년도 조사
 - 패널관리 및 추적
 - 국제학술대회 개최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델 「영차」 시범적용의 과정 및 성과 분석(Ⅱ)

문무경, 이정원, 황해익, 문혁준, 김문정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3개년 동안 수행됨. 1차년도(2009)에는 유보협력 실행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에 착수하였으며, 2차년도(2010)에는 소집단 협력형 시범운영, 협력 매뉴얼 개발 및 시범적용 1단계 평가에 주력하였음. 3차년도(2011)에는 유보협력 컨설팅 패키지 개발 및 전국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임.
- 2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1차년도에 개발한 협력 실행모델을 지속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음. 연구결과의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의 일대일 협력모델 이외에도 소집단 협력모델을 추가로 적용하며, 특히, 현장적용의 내용 및 방법과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시범기관은 물론 여타의 비시범기관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유보협력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유보협력 시범연구사업 실행
 - 시범기관 추가 선정
 - 시범기관 방문 상담 및 지원
 - 지역별 운영협의회 격월 개최(지역별로 각 3~5회)
 - 지역별 시범기관장 및 교사 연수 실시(지역별로 각 3~4회)

- 시범지역 공무원 연수 실시(2회)
- 유보협력 성과 평가
 - 시범기관 성과 평가: 유보협력 성과 평가 지표 및 평가 매뉴얼을 수정 보완하여 신규 8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유보협력 기초선 평가를 실시하였고, 기존 14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1단계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음.
 - 학부모 설문조사: 시범기관 전체 학부모 총 1,901여명을 대상으로 유보협력 시범사업 관련 경험, 인식,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만족도), 요구 등에 관하여 실시
- 영차 매뉴얼 개발
 - 총 6개의 장으로 구성, 각 장의 내용은 영차 매뉴얼 개관, 영차 모델과 지원 체계, 유보협력의 과정, 유보협력 지원체계의 활용, 유보협력의 성과 평가, 유보협력 홍보에 관한 것임.
-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3. 1차년도 영차 시범연구의 추진 과정

-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선정
 - 일정 준거²⁾에 의해 부산광역시(6개 기관), 경기도 부천시(4개 기관), 강원도 홍천(4개 기관), 총 14개 시범기관(7쌍) 선정
 - 14개(7쌍) 시범기관 교직원 총 131명 참여 (재원 영유아 총 1,380명)
- 시범지역 담당공무원 및 시범기관 대상 1박2일 전체 워크숍 개최
- 지역별 시범기관 방문 및 전체 교사 대상 설명회 개최
- 시범기관쌍별 유보협력 연간 계획 수립 및 협력일지와 협의록 작성
- 시범사업 홍보물 지원: 시범기관 차량용 배너 및 앰블렘, 학부모용 안내책자
- 시범기관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특강 지원

2) ①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인접성, ② 별도의 기관장 존재 (배우자, 친인척기관장 운영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제외), ③ 시범사업에의 지속적 참여(2009~2011) 가능, ④ 기관설립유형별 안배(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등), ⑤ 유사한 기관규모 및 서비스 수준 등

- 영차프로젝트 홈페이지 개설
- 지역별 운영협의회 및 '중앙 자문위원단' 회의 개최
- 시범기관 학부모 전수 조사 실시: 유보협력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대한 설문
- 시범기관 기초선 평가 실시: 외부평가자에 의한 서비스 질 및 유보협력 수준 평가
- 유보협력에 대한 연구진의 시범기관 모니터링 및 상담
- 정책세미나 개최: 유보협력 시범연구사업의 과정 분석 및 사례 발표

4. 2차년도 영차 시범연구의 개요 및 추진 과정

□ 2차년도 영차 시범연구의 개요 및 추진 과정

- 2차년도 중점 추진 사항
 - 1) 프로그램과 교사 협력 강화, 2) 소집단 협력형 추가, 3) 유보협력 영차매뉴얼 개발, 4) 시범지역 공무원 연수 강화, 5) 유보협력 사례의 공유, 확산 및 홍보 확대
- 2차년도 영차 시범연구 추진 과정
 - 시범기관 추가 선정: 1차년도(2009년)에 부산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강원도 홍천군, 3개 지역의 14개 기관을 선정한 것에 이어, 2차년도에는 부산광역시의 일대일 협력형 1쌍과 강원도 홍천군의 소집단 협력형 2집단을 추가로 선정하였음. 총 22개 기관(유치원 10개원과 보육시설 12개소)이 참여함.
 - 지역별 운영협의회 개최 및 전체 시범지역 공무원 협의회 개최
 - 시범사업 지역별 교사연수 개최: 지역별로 3~4회 실시(총 11회).
 - 부모교육 강사 섭외 및 지원: 강원도와 부천지역에서 부모교육 실시
 - 시범기관별 월례협의회 개최 및 연구진 방문 상담
 - 정책세미나 개최: 비시범지역 13개시도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 공무원 등 유아교육과 보육 관계자들을 대상 2차년도 성과와 사례 발표
 - 우수사례집 발간: 총 19개의 협력사례를 협력영역별로 구분, 우수사례집 제작
 - 영차 홈페이지 활용: 영차프로젝트의 홈페이지(www.iycyc.com)를 전담인력을 두어 관리

□ 유보협력 성과 평가 지표 보완

- 2009 평가지표(협력지표와 서비스 질 지표)를 기초로 하되, 2010 평가지표는 협력 내용을 강조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두 기관간의 공통된 성격을 중심으로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한 상호 보완 가능한 성격을 동일한 지표로 검토하고자 수정보완, 재구성하였음. 협력지표 30개와 서비스질 지표 20개로 축소하고 협력지표에 더 비중을 둬.

□ 영차 매뉴얼 개발

- 총 6개의 장으로 구성, 각 장의 내용은 영차 매뉴얼 개관, 영차 모델과 지원체계, 유보협력의 과정, 유보협력 지원체계의 활용, 유보협력의 성과 평가, 유보협력 홍보에 관한 것임.

5. 2차년도 영차 시범연구의 성과 요약 및 결론

□ 시범기관의 성과

- 2차년도 영차 시범사업은 시범기관간의 협력과 행정기관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영차매뉴얼 개발과 교사연수에 주력하고 공무원연수를 실시함.
- 1단계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1차년도 처음 시작 시점에 비하여 시범기관의 유보협력 수준과 서비스의 질이 60%정도 향상되었으며, 학부모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졌음. 또한 시범기관장과 교사들은 스스로 유보협력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도가 높은 점, 보육정보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지원이 다양해지고 적극적인 점 등, 전반적으로 2차년도 시범기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됨.
- 협력영역별 성과
 - 기관운영 협력: 2009년 시행초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유보협력 기관운영을 기대하였으나, 기관의 상황과 제도적인 제약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음.
 - 시설환경 협력: 강원도 소집단 협력형의 경우 현장학습 시 차량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경우 도서관, 강당, 과학실, 바깥놀이터 등 시설을 어린이집과 공유하였으며, 사립(민간) 기관의 경우에는

티밭, 교재교구 등을 공유하였음.

- 프로그램 협력: 2차년도에 실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동참여 활동은 상호기관 영유아에게 보다 풍부한 활동경험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음. 1차년도의 프로그램 협력이 현장학습과 공동 행사 위주의 일회성 협력활동으로 그치는 경향이었던 반면, 2차년도에는 연중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협력 활동 사후 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교사 협력

- 2차년도의 교사협력에 있어서 가장 큰 발전은 모든 시범기관에서 교사협의회를 최소한 월 1회로 정례화한 점임. 연구진의 주관 및 시범기관 자체 교사연수가 강화되었고, 동일 시범지역내는 물론 시범지역간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사 협력이 처음으로 일어난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 부모교육 및 참여 협력: 여섯 가지 협력 영역 중에서 가장 협력이 미진한 부문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기관(부산시 백조유치원과 YWCA 어린이집)에서는 양측 기관의 부모가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계획하여 우수 사례를 제공하였음.

○ 예산 협력: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활동 및 공동 교사 연수를 위한 강사비용 공동 부담, 교재교구 공동 구입 및 교대 활용, 차량지원 등을 통해 비용 절감. 2차년도에서는 교사 협력 및 프로그램 협력이 더욱 활성화된 만큼 예산 절감 폭이 더욱 확대되었음.

□ 학부모 만족도

○ 2차년도에 기존 시범기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유보협력 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학부모의 82.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2009년도 만족도 조사결과시 만족한다는 의견이 39.4%(매우만족 17.2%, 조금 만족 22.2%)에 비하면 상당히 향상되었음.

- 만족 이유로는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풍부함과 질적 향상 52.3%, 아이들의 친구관계 확산 40.5%, 공동 개최로 인해 풍부해진 행사 37.1%, 아이들이 좋아함 25.5%의 순으로 나타남.

○ 유보협력 이전과 비교하여 향상된 부분으로는 프로그램 63.6%, 놀잇감 및 교재교구 25.5%, 실외 놀이 공간 활용 23.9%, 실내환경 14.1%, 부모교육 및 가정과의 교류 11.2%이었음.

- 대부분의 부모들이 영차시범기관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추천하겠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함(82.7%).
- 특히, 2차년도에는 22개 시범기관의 협력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해당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단위기관별로 예산을 지원한 점은 그 자체가 획기적인 성과임. 반면, 시범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전체 회의 및 연수를 위한 일정 조정의 어려움 및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시범사업 지원의 안정성 부족, 시도군청과 교육청의 협력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소극적 태도, 유보협력을 위한 시범기관 교사들의 협의 시간 확보 문제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있음.

6. 향후 사업을 위한 제언

- 유보협력에 대한 시범기관의 자체 평가 시스템 구축
 - 자체평가와 외부평가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도록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함. 개별시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협력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협력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형성적인 내부 평가가 효과적임.
 - 1)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평가양식 내지 도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적인 틀 제공, 2) 평가 지표에 대한 교사 연수 실시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적 적용 모색
 - 1) 통합커리큘럼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사연수 실시, 2) 시범기관에서 기존에 시행한 해당 우수 사례를 활용하여 본보기 제공, 3) 만 3, 4, 5세 담당 아동의 연령별로 교사들이 팀을 이루어 가장 성공적,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교육·보육활동 공유, 4) 각 지역별 담당 연구진이 연간 프로그램 협력 계획을 수립하는 연초에 집중적으로 시범기관 상담 필요
- 시범기관별 유보협력 특성화 사업 추진
 - 시범기관 유형별로 지역적 특성과 여건, 시범기관 자체의 필요에 따라 협력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협력모델은 시설환경 협력(차량지원, 급식지원, 초등학교 도서관 활용 등), 도시 협력모델은 행사 공동 준비 및 실행, 공동교사 연수, 소집단 협력형은 차량 등 물적 자원의 보다 원활한 공유, 운영시간 조정 협력 등을 특성화

할 수 있음.

- 시도군청과 교육청의 협력 실행계획 수립과 실행 및 성과 평가
 - － 본 시범사업이 각 지자체의 자체 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예산 확보가 급선무임. 이외에 유보협력기관 독려와 관리감독, 교사연수, 자료개발 및 보급, 유보협력 홍보 필요
 - － 행정기관의 유보협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간략한 지표 개발 및 협력 실천 여부와 성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 유보협력 컨설팅 패키지 개발
 - － 3차년도에는 유보협력을 위한 모든 노하우를 망라하여 각 지역의 기관들을 상담해 주는 전문적인 조력자용 유보협력 컨설팅 패키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향후 지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지역별로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음.
- 유보협력 성과와 사례에 대한 홍보 강화
 - － 우수사례집을 유사한 여건에 있는 비시범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시범기관 교사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 포상도록 함.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장명림, 이윤진, 이정림, 민현숙, 이세원, 송윤정, 소수정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의 후속 연구로서, 2차년도인 2010년에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효과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초점을 둠.
 - 1차년도에 비해 가정 유형, 지역, 대상수가 확대된 프로그램을 시범적용하여 긍정적인 효과 발현과 모니터링을 통해 모형적용의 수정보완을 하고 취약계층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을 확정하여, 이의 활성화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문헌연구와 자료수집 및 분석
 - 프로그램 추가 개발 용역 의뢰
 -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언어, 인지, 정서 영역)외에 사회 영역 추가 개발
 - 유아용 개념학습활동 자료 및 교사용 지침서 추가 개발
 - 1차년도 결과보고회 및 2차년도 시범적용 연수 실시
 - 시범적용 및 현장 연구
 - 대상: 취약계층 영유아 118가정(실험집단 59가정, 비교집단 59가정)
 - 기간: 2010년 5월~11월
 - 참여인력: 드림스타트 보육교사,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의 희망유아 교육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유아교육복지전문가·영유아조정자·지역사회교육전문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사, 하나센터의 사회복지사·남북통합지원센터의 수료생 등
 - 자료분석

- 모니터링
 - 대상: 참여인력, 참여인력의 소속 기관장
- 전문가 지문회의

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과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 기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연계 내에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 첫째,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 둘째, 영유아에게는 바람직한 교육적 발달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셋째, 부모에게는 영유아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넷째, 교사 및 참여인력에게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료와 연수를 제공하고,
 - 다섯째, 지역 내 영유아 대상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육아지원 모형임.
- 연도별 주요 내용
 - 2009년(1차년도):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 2010년(2차년도):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 2011년(3차년도):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확대 적용

- 1차년도(2009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에 근거하여 시범 적용을 확대하여 실시
- 전달체계에 속한 참여인력 수의 확대, 특성 및 자격조건 다양화
- 시범적용 대상 지역 및 가정 수의 확대, 가정유형의 다양화 시도
-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영유아들에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 하되 가정유형별로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적용
- 시범적용 실시 전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에 대한

설명, 시범사업의 실시 방법과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 실시

- 1차년도에 개발하고 적용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으며 필요한 활동의 경우 추가로 개발하여 주 1회 총 16주간 실시

4.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 프로그램 효과분석 결과

○ 영유아 지도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분석

- 영유아 발달검사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시범적용 후 사후검사에서 사회성, 자조행동, 언어이해, 그리고 글자 및 숫자 영역에서 점수가 향상되었음.
- 영아기 부모의 양육수준은 실험집단의 경우 언어적 지원에서 사후검사 결과 점수가 향상되었음.
- 유아기 부모의 양육수준은 의복제공, 음식제공, 주거제공, 건강유지, 인지적 지원, 언어적 지원, 훈육, 놀이지원, 학습지원, 사회연계의 영역에서 사후검사 결과 점수가 향상되었음.

○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양육자 만족도

- 시범적용에 참여한 영아의 주 양육자 모두가 해당 영아가 프로그램 적용 후 변화했다고 인식하였음.
- 시범적용에 참여한 유아의 주 양육자의 대부분(91.5%)이 해당 유아가 유아 프로그램 적용 후 변화했다고 인식하였음.
- 시범적용 후 개념학습을 통해서 89.7%의 응답자가 해당 아동이 변화했다고 인식하였음.
- 부모교육을 진행한 이후, 주 양육자 스스로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변화했다'는 응답이 70.0%로 나타남.
- 시범적용을 실시한 후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겠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90.8%의 응답자가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모니터링 결과

○ 참여인력을 통한 모니터링

- 전달체계: 사업 수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업무를 지원해주는 인력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 참여인력: 시범사업에 참여인력 대부분이 이번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
- 프로그램
 - 영유아 지도 프로그램: 대부분의 참여인력들이 영아용 및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이 영유아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 중 참여 영유아가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변화를 보였다고 응답하였음.
 - 동화를 이용한 개념학습활동: 대부분의 참여인력들이 영유아 지도 프로그램이 유아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거의 모든 유아들이 활동을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양육자)에게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96.3%의 참여인력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음.
 - 사업간 연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협의회와 총평회를 통해 적용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를 하거나, 시범적용 가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본 시범적용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였음.
- 참여인력의 소속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 전달체계: 5점 만점 중 문항별로 3.40~4.20에 걸쳐 분포되게 나타났다.
 - 참여인력: 5점 만점 중 문항별로 4.00~4.53에 걸쳐 응답이 분포되어, 전달체계 영역보다는 다소 높은 점수대를 보였음.
 - 사업간 연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3.27~3.8에 걸쳐 응답이 분포함.

5.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활성화 방안 제안

□ 통합적 육아지원의 활성화 방안

- 정부 부처 사업에서의 적용 방안: 사업들 간의 특징과 장점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이에 각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보완하고, 본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성요소 및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임.

- 프로그램 활용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인력에 대한 연수, 필요한 교재·교구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
 - 전문인력 연수 지원 방안
 - 참여인력의 배경에 따라 맞춤형의 소집단 연수가 필요함.
 - 프로그램의 활동 적용 기법뿐 아니라, 취약계층 가정 지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부모 상담 기법, 효과적인 영유아 지도법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다루어야 함.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및 프로그램의 현장에 착근될 때까지는 그 적용과정을 심층적으로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지원 방안: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자료가 수록된 매뉴얼을 제공해 주어야 함.
 - 맞춤형 지원 방안
 - 취약계층 가정 유형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 부모의 양육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이 필요함.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은 육아지원 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 기관과의 연계를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 제언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의 일반화를 위해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은 본 연구의 3차년도(2011년도) 연구에서 추진될 예정
 - 정부부처 취약계층 사업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의 연수와 보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적용의 일반화를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이 요구됨.
 - 참여인력에 대한 프로그램 연수뿐만 아니라 전달체계 관계자 및 참여인력들이 직접 관계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이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진단해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컨설팅이 추진되어야 함.
 -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사업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함.
 - 사업 간의 협력을 통해 기 구축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을 활성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임.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문희, 최혜선

1. 서론

- 본 연구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하고, 지방정부 특수시책 중 공인 어린이집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안 및 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둬.
-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함. 보육시설 공급 및 설치 관련 정책, 차등 지원 및 만5세아 전액지원 등 보육료 지원 정책, 교사 관련 지원정책, 질 관리 정책 등 각종 예산 사업의 현황 파악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정책방향을 도출함.
 - 지방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함.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고유의 보육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을 파악함. 또한 이들 지방정부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효과성 및 우선순위를 파악함.
 - 지방의 특수보육시책 중 서울형과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등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시설장과 부모의 인식 및 의견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앞서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육정책의 방향 및 개선 방안 등 정책 제언을 도출함.
-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문헌연구, 행정기관 자료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보육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전국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보육정책 자료와 통계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음. 자료 수집은 부분적으로는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일부는 부처가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음.
 - 심층 분석 대상 보육사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보육담당 공무원,

서울시와 부산시 어린이집 시설장과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2. 보육정책 현황

- 보육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보육정책 성과 지표를 제시하였음. 이는 보육정책의 추진 방향과 성과 추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줌.
- 보육비용 지원 정책은 2004년 이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으로, 보육료 전액지원아동 및 전체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은 2009년 현재 각각 45.0%, 65.7%임. 소득대비 보육료 지출 비율은 2009년 7.4%임.
 - 영아 기본보육료의 성격은 여전히 불분명함.
 - 만5세 보육료 지원에 소득제한 적용은 단순한 부모 비용지원임을 나타냄.
 - 유아 보육료 낮은 지원 단가, 민간우위 공급 구조 등으로 보육비용 지원의 부모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임.
 - 취업모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소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특별활동 비용의 지역 차이가 크고 중앙정부 지침은 부재함.
- 양육수당은 2009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2009년 차상위계층 이하 0, 1세 아동 888,811명 중 8.7%인 77,000명이 지원 받았음. 지원액은 10만원임.
 - 저소득층 영아 보육시설 이용 저해, 모의 취업 동기 약화 등 비판 요인이 있어서 유아로의 확대나 지원금 확대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함.
- 보육 지원 확충으로 보육재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2010년 GDP 대비 보육재정 비율은 0.47%임. 유아교육 비용이나 농어촌 영유아 지원 등을 포함하면 0.62%가 됨. OECD는 1% 이상을 권장함.
 -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예산은 2009년에는 평균 아동 1인당 15만원 수준이나 분포는 4~98만원으로 지역간 격차가 큼.
- 2009년 보육시설 공급률은 54.2%, 보육시설 이용률은 42.9%, 아동수 대비 국공립 시설 이용 비율은 6.1%임. 시·도, 시·군·구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과제임.
- 시간연장형 교사 연장 근무 수당 지급방식은 탄력적 정책이나 교사 장시간 근무는 개선 되지 않음.
 - 소수 아동 인건비 지원방식은 효율성이 낮고, 관리체계 부재로 이용 아동 대

부분에게 월 60시간을 지원하고 있음. 거점형 시설로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 있음.

- 평가인증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통과 시설 비율은 2009년 신청 기준으로 60.5%임.
 - 정보 공개 미비로 부모 활용도 낮고, 재정지원과의 연계 부재로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담보 역할 부족함. 평가 의무화로 전환도 검토 필요
- 교사는 평일 9.5시간 근무로 8시간 근무로 준수가 어렵고, 평균 급여는 126만원임.
 - 교사수당 전국 미적용, 대체교사 수 제한적, 보수교육 지원 미미 등이 과제임.

3.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우선순위

- 지방정부 특수시책을 8개 영역 66과제로 분류하고 공무원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 과제를 선정함.
 - 우선순위는 부모 지원, 교사 등 인력 지원, 공공보육시설, 특수보육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부수적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필요성 우선순위가 낮음.
 - 앞으로 보편적 현금 지원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다자녀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나타냄.
 - 교사수당 지원에도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특히 평가인증과 연계한 보육 교사 수당 등은 전국적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공무원들이 국공립보육시설에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도와 효과성도 높이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민간시설 운영비 지원은 삼가야 할 정책임을 시사하며, 동시에 아동 간식비, 냉난방비 등 부가적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도 필요성과 효과성 평가가 낮음.

4. 공인 어린이집 운영 효과와 시사점

- 지방정부의 보육정책 심층분석으로 서울형 어린이집과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살펴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공인 어린이집 수용성은 선정 기준과 지원조건에 달려

있으며, 평가 기준과 지원조건은 보육시설의 공공성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수위 결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함.

- 공인 어린이집 운영에서 가장 큰 공감대는 회계의 투명성임. 운영조건의 적절성 조사에서 시설명의 1계좌로 회계관리 투명성이 가장 점수가 높음. 그러나 서울시 어린이집의 재무회계규칙에서 기타 운영비 항목 지출 10% 준수는 74.4%가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하였음.
- 정부가 정한 공인 어린이집의 조건 유지의 어려움이 상존함을 시사함. 그럼에도 서울시가 민간과 가정 서울형 보육시설에 추가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서울형 시설장의 17.0%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사후관리는 조사대상 전체의 33.5%, 서울형 보육시설장은 46.7%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부산의 경우도 평가기준이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모두 50.0%이상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낮고 또한 이를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삼지 않는 부모도 상당수로 홍보나 정보 전달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냄.
- 서울시 시설장들은 공인 어린이집 운영 개선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 시설체계화와 열린 운영, 공공성 확대에 대해 7점 만점에 서울 5점 수준, 부산 5.7점 내외임
 -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리 체계화, 교사의 자존감이나 업무 적극성, 자존감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됨.
 - 재정운영도 개선이 되었다는 응답이 64.2%로 나타남. 부산의 경우 보육시설이 공보육어린이집에 참여한 이유는 안정된 교사채용이 50% 수준이었음.
- 공인 어린이집의 부모에 대한 효과는 질적 수준 개선에 대한 인식, 보육료 감소로 나타남. 특히 시설설비, 교재 교구 및 장비, 내부분위기의 3개 항목에서 변화되었다는 비율이 서울과 부산 모두 상대적으로 높음.
- 서울의 경우, 투자 대비 서비스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서울형 시설장의 35% 정도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부산은 67%임.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나 유지 조건은 서울형 기준보다는 강화되어도 무방할 것임을 시사함.
- 서울시 시설장의 70%가 자율장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전문가 교사 연구 지원을 요구함.

5. 향후 정책과제

가. 보육비용 지원

- 보육료 지원 및 부모 부담과 관련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만5세아 무상보육에 대한 소득제한 해소가 필요함. 만5세 무상보육이 보편적 학교준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합리적임.
 - 취업모에 대한 소득 감액 제도는 제도 도입 자체는 높이 평가하지만, 소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평가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은 일반 보육료 추가 지원보다는 다자녀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등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보육료 이외에 기타 필요 경비 상한선은 지역 차이가 큼. 중앙정부가 특별활동 비용, 시간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여야 함.
 - 추진 과제의 하나로 현금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아 보육료 지원단가와 실제 보육료간의 격차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 보육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추진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2011년에 시범사업이 예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는 비용 효율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보육서비스 공급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은 다시 한 번 전면적 검토가 필요함.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효과성도 높이 평가하였음.
 - 보육시설 이외에 육아지원시설이 주요한 인프라로 확충되어야 함. 서울 이외에 재정 취약지역에도 설치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함.
- 보육시설에서는 실시하는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함.
 - 시간연장형이나 장애아 보육, 일시보육 등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거점형 보육시설을 제안함.
 - 주간에 모든 아동이 12시간 보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보육시설 이용시간 체계를 다양화하고 비용지원체계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함.

- 평가인증제도에서 앞으로의 정책과제는 결과 활용과 재정 지원과의 연계임.
 - 전체 보육시설은 우수인증시설, 인증시설, 미인증시설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인증결과는 총점 등급과 영역별 등급, 장단점 등을 공개하며, 부모에게 서류 통보를 보육시설 의무로 명분화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인증제도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으로는 1단계는 평가인증제도와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운영비 지원과 연계하고, 2단계는 영아 기본보조금, 3단계는 차등보육료로 설정하고, 평가인증 시설의 확대 추이에 맞추어서 일정 기간을 두어 정책도입을 예고한 후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 장기적으로 평가인증제도는 의무적 평가제도로의 변경을 검토함.
- 보육교사 처우 및 환경 개선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음.
 - 보육교사 처우 관련 예산 사업 중 대체교사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 되는 사업으로 제도 도입은 주요한 정책적 성과라고 할 수 있음. 당분간은 대체교사의 수를 증가시켜야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비담임 교사 추가 배치로 전환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탄력 근무로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오후반 교사 배치가 검토되어 보육교사가 아동과의 보육활동 이외에 보육활동 준비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교사 수당 지원은 액수 증액과 더불어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전국적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별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공급과 이용의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이루는 문제는 주요 정책과제임. 보육 공급과 이용률은 동일 시·도내에서도 시·군·구별 편차가 큼. 특히 전북이 지역별로 표준편차가 10%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나타냄.
 - 중앙정부가 보육재정 시·도 균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지방정부간 특수시책 사업비의 지역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여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중 평가인증보육시설 교사 수당과 같은 시책 등 일부를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은설, 유해미, 김선화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왔고, 2009년 12월에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종합 발전 방안’에 따라 2010년 이후 유아교육 부문의 획기적인 정책 강화가 추진 중임.
- 이에 따라 유아교육 주요 정책 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현황 및 성과 분석 2) 서울시 에듀케어 사업 운영 현황,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 조사를 통한 종일반 운영 확대방안 모색 3) 향후 유아교육 정책 과제 모색임.
- 주요 연구방법은 1) 유아교육 관련 문헌 및 해당부처 통계자료 수집·분석 2) 유아교육 사업 관련자(유치원 원장)에 대한 면담 3) 서울시 에듀케어 사업(유치원 원장, 이용 학부모 대상)에 관한 설문조사임.

2. 유아교육 정책 사업의 현황

가. 유아학비 지원

- 국·공·사립유치원 및 유아교육 위탁기관에 취원한 원아를 대상으로 ‘만5세아 무

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종일반비' 등을 지원함.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으며, 농어촌 지역 및 인구 30만 미만 도농복합지역에 속하는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게 월 11만원이 지급됨.

다. 유치원 교육력 제도

-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유치원 평가 사업비,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사업비, 유아기본학습능력 발달 및 지원(희망유아교육사 사업), 세대간 지혜나눔(종일반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지원) 시범사업, 유치원 종합복지서비스 사업,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지원이 있음.

라. 유치원 환경개선

- 종일제 유치원 환경개선, 공립 병설유치원 환경개선비, 공립유치원 확충 등을 지원함.

마. 유치원 설치와 이용

-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현황
 - 시·도의 유치원 총수는 8,373개원이고, 이들 중 국공립유치원은 4,493개원(53.7%), 사립유치원은 3,880개원(46.3%)임.
 - 유치원 총 원아 수는 537,361명이고, 이들 중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125,536명,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411,825명(76.6%)임.

바. 유아교육 재정

- 유아교육 예산 집행 현황
 - 2009년 기준 전체 유아교육 재정 1,235,853백만원 중 공립유치원에 투입된 예산은 723,559백만원으로 약5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시·도 교육청별 총교육 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7%이며,

1인당 유아교육 재정액은 2,258,122원임.

3.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 시·도 교육청별 유아교육 특색 사업
 - 교사에 대한 지원 사업은 크게 1) 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 2) 국내외 연수 지원 3) 교사 자율모임에 대한 지원 4)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분됨.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지원은 크게 1) 종일반 운영 및 인력에 대한 지원 2) 환경 개선 지원 3) 지역 공동체 운영 지원 등으로 구분됨.
-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 서울시는 총 7,704,787천원, 부산은 총 2,429,773천원, 경기도는 총 5,295,871천원의 지방비를 유아교육 부문에 지원하고 있음.

4. 유아교육 정책사업 심층 분석 - 서울특별시 “에듀케어” 사업을 중심으로

가. 유치원 에듀케어 사업 현황

- 에듀케어 운영 유치원 수 및 유아 현황
 - 2010년 현재 에듀케어 사업을 운영 중인 유치원은 모두 622개원이며, 2010년 현재 에듀케어 사업을 운영 중인 유치원의 취원 유아는 모두 17,022명임.
- 예산 현황
 - 에듀케어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에듀케어 운영비, 종일제 자원봉사자 인건비, 시설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함.

나. 에듀케어 유치원 운영 실태 및 학급운영에 관한 인식

- 에듀케어 유치원 운영 실태
 - 유치원 원장들이 에듀케어 학급을 운영하는 주된 동기는 부모들의 요구가

63.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에듀케어 학급의 입학대기 원아 수는 평균 24.3명으로 나타나는데, 공립유치원의 평균 대기 아동 수는 사립유치원의 약 두 배(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시설·설비 실태에서는 에듀케어 전용교실을 설치한 경우는 전체의 약 절반수준인 50.1%로 나타나며, 교실바닥과 난방의 설치율은 약 98%수준인 반면, 낮잠실의 설치율은 3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에듀케어 학급 운영에 대한 인식
 - 에듀케어 학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취업모 자녀의 양육문제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장 높은 비율(84.7%)을 차지함.
 - 에듀케어 학급의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유치원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66.9%).
 - 에듀케어 운영비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71.4%, 사립유치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58.9%로 나타났음.

다. 에듀케어 유치원 이용 현황

- 에듀케어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에듀케어 학급 이용 유아의 유치원 등원시간은 오전 8~9시 사이가 59.1%로 가장 많고, 하원시간은 오후 5~7시 사이에 71.8%, 오후 7시 이후에 귀가하는 경우는 10.2%로 나타났음.
- 에듀케어 교육내용이 정규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0%이며,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52.2%가 안전한 보호 위주라고 응답함.

라. 에듀케어 이용 학부모의 만족도

- 종일반 교사에 대해서는 88.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사립유치원에 비해 공립유치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에듀케어 학급 운영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항목들에서 사립유치원에 비해 공립유치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유치원의 실내 환경(교실, 조리실 등) 등 대부분의 항목들에서 약 82~86%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단 에듀케어 학급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71.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마. 시사점

- 서울시 에듀케어 사업은 특히 학급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정서적 안정과 편안한 분위기에 주력하며, 교육효과를 위해 오전 수업과의 연계를 강조하여 활용도가 높음.
-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종일반 운영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이 요구됨.
 - 취업모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오후 8시 이후 이용아동을 위한 석식제공 방안 마련과 사립유치원의 주말(토요일) 및 방학 운영이 엄격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에듀케어 전용교실의 설치 확대, 수면실 등 실내설비의 보완, 그리고 모래·놀이터 영역 등 실외 설비 전반의 확충이 요구됨.
 - 인건비 지원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가 요구됨.

5. 향후 정책 과제

가. 유아학비 지원 방향

- 보편적인 공교육 실현의 측면에서 향후 5세 무상교육의 전면 실천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유아학비 지원의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역 특색사업의 발굴 노력이 요구됨.

나. 종일반 제도의 내실화

- 특히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규정하여 취업모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에듀케어 운영에서 공·사립유치원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다. 유치원 교육력 제고 사업의 개선

- 교사의 근무여건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등과 교육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희망유아교육사 사업 등은 유치원 기능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세대간 지혜나눔 사업의 활성화는 유치원 종일제 특성화 교육 및 특별활동 인증제와의 연계 속에서 모색되어야 하며, 희망유아교육사 사업은 정부 타부처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임.

라.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유아학비 부담 경감 등 유아교육 선진화의 성공적인 추진이 향후 유아교육의 최우선 과제이므로 선진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와 노력이 요구됨.

수탁연구과제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모델 개발 연구

김은설, 이운진, 최진, 조혜주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가. 연구목적

- 산간, 도서, 벽지를 포함하는 농어촌의 특수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구체적 소규모 시설 운영 모델 및 지침을 제시함.
- 더불어, 시범사업의 단기적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사업 추진 원활화와 추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보육시설 이용을 하지 않는 농어촌 영유아의 양육을 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운영모델들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모델 개발 및 지원방안 제시
 -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수요 조사 및 분석
 - 지역 특성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모델(지침) 개발
-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 평가
 -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만족도 조사
 - 소규모 보육시설 관리·운영 평가 및 전망, 개선사항 제시
-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가정 부모 양육 지원 방안 모색
 - 농어촌 지역 부모 양육 영유아 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 시범사업 평가 및 전망, 개선 방향 제시

2. 연구방법

문헌자료의 수집 및 검토

- 기존 연구, 정책자료, 국외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연구의 기초로 삼고 시사점을 도출함.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사업에 대한 잠재 수요조사(1차: 87개 군청 담당자, 2차: 1차 조사 누락 지역인 10개군 54개면 주민 352명)와 소규모 보육시설 시범사업 참여 6개 지역 주민 71명을 대상으로 한 사후 만족도 조사 등 2 가지임.

면접 및 관찰 조사

-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보육시설과 기타 보육서비스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사업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자를 방문 면접하고 해당 지역을 관찰, 조사함.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 1차 전문가 자문회의는 연구진행 방향, 농어촌 보육서비스 운영 지침의 개발,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으며, 2차 지자체 공무원 자문회의는 연구에서 개발된 각 사업의 구체적 운영안내(지침)에 관한 실무자로서의 의견과 실제 운영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논의함.
-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선점과 현실적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함.

3. 연구결과 1: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모델 개발

가. 운영 방식의 제안

- 소규모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일종으로 보육 시설 이용에서 소외지역

인 농어촌, 특히 도서, 벽지, 산간 지역의 영유아에 대해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농어촌에 설립된 상시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작은 규모의 보육시설을 의미함.

- 입지조건은 현재 보육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특히 먼, 리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지역 면적이 넓어 이동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설치하게 됨. 국공립설치 대상 지역 중 수요가 매우 적은 경우에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음.
- 보육아동 수가 5명 이하 정도로 매우 적어 보육교사 1명만이 근무하는 극소규모 보육시설인 경우 보육실은 영아반/유아반으로 나눌 수 없고 1개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보육교사가 모든 아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함.
- 보육대상은 만0세~만5세 아동을 원칙으로 함. 반편성과 혼합반 기준은 보육사업 안내를 따르되 농어촌 특례에 따라 교사 대 아동 수 기준 적용을 받으며 규모가 비슷한 점에서 가정보육시설에 준하여 2세와 3세의 혼합반도 가능함. 지역 특성에 따라 영아반만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체 아동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혼합반을 구성할 수 있음.
- 아동수와 상관없이 취사부를 둘 수 있고 취사부 인건비는 100% 지원, 취사부는 교육을 이수하여 보육보조인력의 역할을 겸할 수 있게 함.
- 시설장은 국공립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을 갖춘 경우 가능하며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시설장 인건비는 현행 규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받아 아동수 20인 이하이어도 기준에 따라 지원함.
- 농어촌 특례를 적용하여 추가 교사 1인에 대해 인건비 100%를 지원함.

나. 시범사업 평가 및 향후 전망

- 개원 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은 원장, 교사의 인품, 급식과 간식, 보육시설·설비의 위생정도, 운영시간등 보육시설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어린이집 주변환경이나 차량운행, 보육시설의 안전성, 집과의 거리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현재 이용 아동이 45세 유아가 되면 큰 규모 시설이나 유치원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어 유아보다 영아기에 부모들이 선호하는 시설이라고 보임.
- 농어촌의 아동 수가 많지 않고 줄어드는 현실에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히 보육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대규모 국공립을 한 곳에 천천히 짓기 보다는 아이들이 사는 곳 가까이 쉽게 오갈수 있는 거리내 소규모 국공립을 신속히 설치하여 보육수혜율을 높여야 함.
- 운영비 부족 시설장 인건비가 해결되고 소규모 보육시설을 영아반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함.
- 소규모 시설은 독립형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분원형으로 설립하는 것이 다양한 방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임. 분원형은 운영비의 규모경제 실현, 시설장 인건비 절약, 교재교구와 설비 사용 용이, 시설 폐원시 인력, 물자 국공립 흡수가 쉬움, 시설장 운영 노하우가 소규모 시설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음.

4. 연구결과 II: 농어촌·도서·벽지형 보육서비스 모델 개발

가. 이동식 놀이 버스 운영 모델

- 이동식 놀이 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가정 육아 지원을 위한 사업임. 농어촌에 거주하는 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이동식 놀이 버스 서비스를 통하여 아동 발달을 촉진하고, 육아 관련 교육 기회가 희박한 주양육자에게 놀이 및 상호작용의 중요성 교육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함.
- 이동식 놀이 버스는 놀이감과 언어활동용 도서를 가지고 농어촌 마을에 방문하여 놀이교실과 놀잇감 및 도서 대여사업 및 각종 문화 프로그램 등의 특별지원 사업을 수행함. 사업 대상자는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농어촌 마을의 영유아 및 부모 또는 영유아 양육자임.
- 이동식 놀이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놀잇감 및 도서와 관리체계, 이동 수단인 차량이 최소한의 인프라로 확보되어야 하며, 활용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것 또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함.

나. 부모협동 놀이그룹 사업

- '부모협동 놀이그룹'이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보육시설은 아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일종으로,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 규모는 상시 영유아 3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 책임은 놀이그룹에 등록된 모든 부모가 지며, 실질적인 운영 방법은 '부모자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놀이그룹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함.

다. 농번기 임시 보육방 운영 모델

- 농번기 임시 보육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가정 육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번기 보육 등의 특수보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농업 종사자 가정의 영유아가 3명 이상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마을 공동시설 및 마을 주민의 주택에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취사시설과 화장실, 세면대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보육교사가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보육료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료의 70%를 냄.

라. 준공영(準公營) 섬마을 보육가정

- '준공영 섬마을 보육가정'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아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일종으로, 인근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역 중에서 도서지역에 한정하여 해당 도서지역의 주민(보육모)이 자신의 집에서 영유아 보육을 제공하는 사업임.
- 보육교사 공급이 수월하지 않는 도서지역임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 중에서 제시하는 자격 중 하나를 갖추면 보육모를 할 수 있으며 인건비는 100% 지원됨. 총 영유아 중 보육모 자녀를 제외하고 영아가 과반이상일 경우, 취사부를 두어야 함.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지원체계 개편 방안

서문희, 최윤경, 최혜선

1. 연구 목적, 내용 및 방법

□ 보육시설 이용시간 유형을 다양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에 포함되도록 책정하며, 소요 비용을 부모와 정부가 적정하게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함. 구체적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육시설 운영시간, 아동 이용시간 유형 및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료 파악
- 보육시설 운영시간, 이용시간 등에 대한 시설장, 교사, 부모, 전문가 의견 파악
- 외국의 이용 기본시간 설정 사례 및 기준, 지원 시간 차별화 등 파악
- 보육시설 운영시간, 이용시간 원칙을 설정하고, 이용시간별 적정 보육료를 추정하며 이에 대한 정부와 부모의 비용 분담 방안 마련 및 소요재정 추정
- 이용시간 및 비용 차이를 아이사랑카드 바우처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

□ 연구방법

- 선행연구, 문헌 및 해외자료 고찰
- 2009년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 분석
- 시설장 21명, 보육교사 11명, 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 보육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문제 및 정책방향 의견 수집

2. 영유아 보육시간 관련 현황 및 시사점

□ 영유아의 보편적인 보육 이용 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용시간의 다양화 추진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음.

- 첫째, 이용시간의 다양화 및 이에 대한 개념화가 요구됨.
- 둘째, 교사 8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연장근무 수당, 중장기적으로 종일제 또는 단시간 근로 교사제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직접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보육시간과 일과 준비 및 사무를 위한 업무시간,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으로 구분하여 각 시간대를 확보할 필요 있음.
- 셋째, 이용시간에 의한 보육 서비스 유형이 구체화됨에 따라 반 구성과 표준보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공용 지침의 마련이 요구됨.
- 넷째, 차등 보육료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요구되며, 단축형 및 종일제 유형에서 부모와 정부의 비용 분담 기준이 필요함.
- 다섯째, 종일 보육의 대세적 흐름 속에서도 단축형 등 다양한 이용시간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와 선호도는 존재하므로,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됨.
 - 실제 보육이용 시간, 즉 등원 및 하원시간은 크게 오후 4시 이전 36.5%, 오후 4~6시 45.2%, 오후 6시 이후 18.4%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3. 외국 사례

- 외국 사례로 스웨덴과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았음. 두 나라 모두 다양한 서비스, 합리적 이용시간 및 지원체계를 갖춤.
 - 스웨덴은 실제 이용시간대는 반일제에서 시간연장, 야간보육까지 부모의 근로 시간에 맞춰 다양하게 분포하고,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당 15시간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는 취업모 등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주당 40시간까지 지원함.
 - 호주 역시 보육서비스의 유형을 매우 다양하고, 부모 취업 등 요건에 따라 주당 24시간까지 기본으로 지원하고, 이외는 가정 사정을 고려하여 50시간까지 지원함.
- 다양한 서비스, 합리적 이용시간 및 지원체계에 따라 비용, 반 배치, 프로그램이나 교사 배치 등이 매우 유연하게 적용됨.

4. 보육시간 모형 및 적용방안

-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부모 심층면접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살펴본 영유아 보육시간에 대한 정책 방안을 탐색하여 정책방안을 제안하였음.

가. 기본원칙

-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시간과 이용시간 유형별로 보육료를 차등화하는 정책대안 마련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음.
 - 부모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 다양성을 보장함.
 - 둘째,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편 발생을 최소화함.
 - 셋째, 보육시설의 운영상 사정을 반영하여 탄력성 보장이 필요함.
 - 넷째, 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시설의 운영 부담을 반영함.
 - 다섯째, 부모들에게 보육의 원칙적인 이용시간을 알려줌.
 - 여섯째, 부모와 국가의 부담 능력을 고려한 정책적 선택을 필요로 함.

나. 운영 및 이용시간 기준 설정

-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보육시설에 인도되는 시간부터 다시 부모에 인도되는 시간까지로 명시하고, 기준 이용시간을 종일제와 단축형으로 구분, 명시
 - 종일제 보육은 오전 7:30부터 오후 7:30분까지 이용을 의미함.
 - 모의 취업 이외에도 구직, 직업훈련 등 취업 관련 사유와 한부모 가정, 보호자의 질병 등 간호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가정 등을 포함함.
 - 단축형 보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으로 명시하고, 일하지 않는 부모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다. 보육료 기준

1) 유형

- 보육료는 평균 오후 6시 정도의 귀가 기준의 8시간 종일제를 중심으로 3시간 정

도 일찍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하는 단축형과 1시간 30분 정도가 늘어나서 7시 30분까지 보육하는 12시간 종일제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눔.

- 모의 취업 등 조건을 기준으로 종일제 이용 자격 기준 부여
- 오후 6시 이후 보육을 연장보육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 12시간 종일제 이용아동 비율은 18.4%로 추정하였는데, 특히 0세아는 41.3%가 12시간제 보육으로 조사되었음.

2) 교사 배치

□ 교사 배치는 교사대 아동 비율이 정하는 교사의 기본 인원을 정규교사로 하고, 근무시간은 평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기본 근무시각은 9시부터 6시까지로 규정함.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봄.

□ 6시 이후 귀가하는 아동 보육을 위해서는 탄력근무, 연장근무 수당, 인력의 추가 배치를 고려함.

- 중장기적으로는 정규교사 추가 교사 배치를 원칙함. 추가교사 배치는 우선 6시 이후에 적용하고 추후에 단축형 보육 이후 보육에 적용함.

□ 교사대 아동 비율은 보육시설의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하는 보육유형과 기본적인 8시간형 종일제 유형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오후에는 만3세 유아가 만4, 5세 유아와의 혼합반 가능성이 높음은 감안하여 1:20으로 조정함.

3) 비용

□ 설정한 가정에 따라 연령별로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함. 현실반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함.

- 8시간 종일제 아동 1인당 보육비용 추정치는 50인 시설은 0세아 755,000원, 만1세아 537,700원, 만2세아 436,400원, 만3세아 318,200원, 만4세 이상아 306,200원임.
- 시간단축형 보육비용은 8시간 종일제 보육단가에서 오후 간식비와 관리운영비 일부를 제외 하면 다소 낮아지는데, 최대치는 만4세 이상아로 22,200원 정도임.
-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보육료는 50인 시설

을 기준으로 보면 8시간제 보육료에 비하여 0세아는 12만8천원, 1세아는 9만2천원, 2세아는 6만3천원, 유아는 약 5만원이 추가되고, 단시간 교사를 둘 경우에는 0세아 31만원에서 4세이상아 7만8천원 정도까지 증가함.

라.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모형 및 비용 추정

1) 제1안

- 원칙적으로 감축형과 7시 30분 보육 소요비용 증감분을 보육료 지원 단가에 적용하여 소득계층별 지원 비율을 적용함.
 - 6시 이후 연장보육 적용도 가능
- 비용은 감축 대비 증가 비용 규모가 작아서 추가 소요예산 없음.
 - 단축형의 경우, 다소 낮아진 보육료를 지원단가에 반영하면 감축되는 비용은 월 51억 9639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623억원이 됨.
 - 12시간 종일제는 저녁식사비와 관리운영비 증가분만 보육료 지원단가에 반영하여 정부와 부모가 분담하면, 2009년 기준으로 추가비용은 35억 6810억원으로 추정되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430억원임.
- 이용자가 취업모이므로 보육료 미지원 부모를 고려하여 6시 이후 12시간 종일제 추가 비용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 필요
 - 이 경우 부담액은 월 44억원, 년 528억원임.
- 교사 처우 및 보육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보육시설도 저녁식사 등 운영 부담이 있음.

2) 제2안

- 교사 연장근무 수당 또는 단시간 교사 배치를 고려하면 최소 월 100억원 이상의 소요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함.
 - 단축형의 경우, 다소 낮아진 보육료를 지원단가에 반영하면 감축되는 비용은 월 51억 9639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623억원이 됨.
 - 12시간 종일제는 저녁식사비와 관리운영비 증가분만 보육료 지원단가에 반

영하고, 이외 인건비 증가분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처리함.

- 수당으로는 만1세아 보육료 시간당 단가, 22일간 1.5시간 연장보육, 근로기준법 상 1.5배를 적용하면 추가 소요비용은 연 1643억원임. 단시간 교사 배치시 보육시설 70%에 단시간 교사 1인 배정시 연간 2585억원이 소요됨.
- 저녁식사와 운영관리비 증가분은 제1안과 동일하게 보육료 지원 상태에 따라 정부와 부모가 분담함. 추가비용은 연간 430억원임.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교사 채우는 개선되며, 어린이집 재정운영도 개선됨.

3) 제3안

- 단축형 이후 시간제 바우처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오후 간식, 저녁식사, 시간당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산정하여 오후 3시 이후 시간 단위별로 비용 적용
 - 인건비 반영 여부 및 조정 필요
- 미취업모는 추가 이용시 전액 본인 부담하고, 취업모는 시간 단위 별로 다른 단가를 보육료 차등 지원 기준으로 적용함.

마.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의 바우처 적용

-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바우처 시스템도 수정되어야 함
- 1안 및 2안은 기본 사항은 동일하고 단지 지원단가에서만 차이가 있음
 - 보육통합시스템에서 단축형 아동과 종일제, 12시간 종일제 이용아동을 구분
 - 아동관리 화면에서 아동유형을 구분, 저장하여야 함.
 - 종일제나 12시간 종일제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확정 후 이에 대한 항목을 개발하고 어린이집 원장이나 시·군·구 공무원이 확인함.
- 제3안
 - 서비스의 변경은 제1안 및 제2안과 동일하고, 단지 현재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자정까지의 시간연장 서비스와 구별되게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시간제 서비스를 별도 서비스로 등록하고 지원단가도 별도 입력하여야 함.
-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아동별로 이용서비스를 구분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아동관리 변경 권한 등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있음.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를 위한 이중언어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장명립, 민현숙, 이세원, 임영심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문화적 배경을 강점으로 살리고 두 가지 언어가 공존하는 이중언어 환경을 활용하여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교육·지도할 수 있는 이중언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선행연구

-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
 - 어머니의 언어로 육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양육을 하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가장 자신있고 언어적 경험이 풍부한 언어로 육아를 할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언어는 자녀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 과거에는 이중언어 사용을 일종의 핸디캡으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조건으로 보는 관점(황혜신, 2007)으로 바뀌고 있음.
 - 이중언어는 거시적으로 사회 발전적인 측면에도 기여함. 이중언어 교육은 다문화 사회에서 이문화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중언어의 학습과 사용이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적 능력 등의 발달에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오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 긍정적

이라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음(Bialystok, 1988; Genesee, 1989; Bialystok, 1999, 이귀옥 외, 2003에서 재인용; Bakers, 1996; Bhatia & Ritchie, 2004).

3.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지원환경 체제분석 및 요구조사 단계

- 다문화 가정 어머니: 현재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여 자녀와 대화를 하지 않고 있으며, 어머니가 모국어를 사용하면 유아들이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음.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자국의 대표음식, 명절, 문화 등이었으며, 이와 함께 자녀의 학습 부진이 매우 걱정이어서 학습 지도를 잘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다문화 관련 전문가와 현장전문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대부분 유·초등학생 대상의 외국어교실로 운영되고 있어 외국어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음. 따라서 유아들에게는 언어만을 가르치기 보다는 어머니 나라에 대한 문화 소개나 체험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음.

□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단계

○ 프로그램 개발 방향

- 중국과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음.
- 개발 방향은 어머니 출신국의 언어와 동시에 문화 경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개발방향에 따른 개발지침은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정 어머니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다룸.
 - 어머니가 유아에게 학습지원을 할 수 있는 주제와 활동을 포함함.
 - 어머니에게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
 - 한국어나 자국어의 문해능력이 떨어지는 어머니를 위해 그림자료나 실물사진, 실제 지원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포함시켜 이해하기 쉽도록 함.
 - 단순 언어 학습교재가 아닌, 각 나라의 유아들이 실제로 듣고 배우는 콘텐츠로 이중언어 학습을 유도함.

- 언어교육에 그치지 않고 유아와 놀이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을 강화함.
- 지역사회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물론 다문화 가정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제 선정과 프로그램 구성

- I부 공통편으로 다문화 국가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머니와 유아가 모양, 위치, 색깔, 숫자 등의 개념을 파악함으로써 학습능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이중언어 학습을 위한 준비단계 과정이기도 함.
- II부는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의 이중언어 학습을 증진을 도모하는 본격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중국/베트남 편으로 나누어 어머니 나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

〈표 IV-1-1〉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 이중언어 학습지원 프로그램 I부(공통편)³⁾

차시	1	2	3	4	5
개념	도입	모양	위치	사물	신체
주제 (글/곡명)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의 중요성	「달달 무슨달」	「어디로 숨을까」	「우산이 필요해」	♫ 머리, 어깨, 무릎, 발
차시	6	7	8	9	10
개념	숫자	동물	색깔	가족	과일과 채소
주제 (글/곡명)	♫ 숫자놀이	♫ 동물 흉내	「색깔 도깨비」	♫ 곰 세마리	시장에 가면

〈표 IV-1-2〉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의 이중언어 학습지원 프로그램 II부

차시	1	2	3	4	5
영역	도입	가족			문화
주제(중국)	이중언어의 중요성	엄마와 아빠	자장가	생일	대표음식
주제(베트남)				할아버지와 할머니	

3) 향후 더 많은 다문화 국가의 프로그램이 추가 개발될 것을 감안하여, 어떤 국가가 추가되더라도 I부 공통편의 기본 주제와 활동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를 다양한 국가편으로 연계·개발 되도록 고려한 것임. 즉,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가정이지만, 기본적으로 자녀지도에서 공유해야 할 내용을 I부에서 제시한 것이 본 프로그램의 특징임.

차시	6	7	8	9	10
영역	문화				자연
주제(중국)	명절과 기념일	나라를 상징하는 것	의복과 장식	놀이	자연
주제(베트남)					

○ 프로그램 활용 방법

- 공통편(10차시)과 각 국가편(10차시) 등 20차시를 모두 연속적인 차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관의 필요에 따라 몇 개의 활동만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차시별로 한 개의 활동을 할 수도 있으나 2차시에 걸쳐 하나의 활동을 반복하거나 연속해서 실시 할 수 있음.
- 기관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를 대상의 교육을 원칙으로 하나, 유아를 동반하여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도 바람직함.
- 프로그램의 시작과 마지막 차시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프로그램 현장 적용 단계

- 장소: 경상북도 상주지역 평생교육원, 서울 ㄷ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 ㄹ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천 ㄷ 센터
- 기간: 2010년 7. ~ 10.

□ 프로그램 평가 단계

- 방법: 면담과 질문지, 교사 일지 분석
 - 다문화가정 어머니 대상: 총 4회에 걸친 연구진 면담과, 마지막 회기때 질문지를 통하여 프로그램 시범적용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봄.
 - 프로그램 주 강사 대상: 총 4회에 걸친 연구진 면담 및 주 1회 서신 보고와 매 회기마다의 일지 작성을 통하여 참여자 및 참여자 가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
- 프로그램 평가 결과
 - 유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자존감이 매우 높아졌음.
 - 어머니: 희망이 생기고 자존감 또한 높아졌음. 동시에 엄마들의 한국어 실력

역시 상당히 높아졌으며, 자녀들과 놀이 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을 배우면서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돈독해 졌음.

- 가정 전체: 아버지들이 자녀와 놀이 하는 시간이 늘었으며, 아버지들이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듣고 난 뒤 아내와 자녀의 참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었음.

4.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 기대효과

- 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으로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의 이중언어 습득 및 학습능력 향상은 물론 자아정체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유아의 이중언어 습득은 미래 인적자원인 유아의 건전한 발달은 물론,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간에 문화적 공감대에 터한 안정적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어 유아의 학습능력 향상과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민 어머니들에게 자녀 학습지도에 필수적인 단어를 자국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다루어보게 함으로써 어머니의 한국어 습득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 고려 사항

- 다문화가정에서에서 자녀 이중언어 지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어렸을 때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의 지원하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한 프로그램 및 자료의 보급이 필요함.
- 특히,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도인력(다문화 이해 강사, 유아교육 교사나 강사 등)에 대한 사전 연수가 필수적임.
- 향후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다양한 다문화가정 어머니 출신국가편으로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임.
- 본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지닌 다양성으로 인한 사회갈등요인을 예방하고 및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평가인증 활성화 및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서문희, 김은기, 이정원, 송신영, 원종욱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인증 결과 등급화 및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형 어린이집 및 보육료 규제 완화 제도 도입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평가인증 점수 분포와 등급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검토하고 정부의 평가인증 결과 활용 실태 및 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시사점 도출
 - 공인 어린이집 사례 검토 및 공급자와 전문가 인식, 요구 및 수요 파악
 - 영국과 호주의 최근 평가제도 개선 및 결과 활용 사례를 파악하여 시사점 도출
 - 평가인증 결과 공개 방안 모색 및 평가인증 결과 활용성 제고 방안 모색
 -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 구체적 정책방안의 하나로 공공형 어린이집과 보육료 규제 완화 어린이집 도입에 대한 정책방안 제시

2. 보육시설 평가인증 현황과 편익

- 평가인증 1차 시행시기에 통과한 시설 상당수가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평가인증 통과 시설들 간의 점수 차이가 큼.
-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와 평가인증 점수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평가인증 총점을 기준으로 등급화를 할 경우에 기준 점수는 95점이 가장 적절함.
- 순현재가치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평가인증의 편익비는 2.08~2.59로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음.

3. 평가인증 결과 활용 실태, 의견 및 정책시사점

- 현재 평가인증 결과 공개는 매우 소극적이며 공개 범위 또한 매우 제한적임. 전문가 대부분은 현재의 공개와 부모의 이용이 충분치 않다고 봄.
- 향후 평가인증 관련 공개 자료는 총점 등급과 영역별 등급을 선호하고 등급은 2~3 등급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함. 단, 시설장들은 평가인증 등급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높음.
-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연계는 디스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던 예산의 지원 중단은 단계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되어야 함을 나타냄.
 - 전문가들의 재정 지원 중단에 찬성하는 지원 항목은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는 85% 수준이고 영아 기본보조금은 62.5%, 차등보육료는 56.2%로 조사되었으며, 적정 유예기간은 항목별로 1년이 가장 높음.
- 인센티브는 환경개선비, 종사자 수당을 선호함. 교사 수당은 많은 지방정부가 지급 중이나, 편차가 커서 중앙정부 정책으로의 수용 가능성 모색이 필요함.

4.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 관련 의견 및 정책시사점

- 서울과 부산 공인 어린이집 사례를 검토하고 공공형 및 보육료 규제 완화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장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음.

가. 공공형 어린이집

- 자율정보다 공공형이 수용가능성이 높음.
- 공공형 어린이집의 조건은 전문가와 시설장 의견이 차이를 보이지만 평가인증 이외 추가 조건을 둘 수 있음을 나타냄.
 - 보육전문가는 어린이집 복수운영 및 학원 등 유사기관 동시 운영 대표자 제한 94.8%, 용자 과도한 자가시설 제한과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놀이터 요건 충족은 92% 수준, 임대시설 제한은 72.4%인 반면,
 - 시설장은 자가시설 및 자기자본 또는 상환금 비중 33.6%, 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유사기관 운영 금지 45.8%,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놀이터 요건 충족 54.2%

로 낮았음.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도 전문가들은 높은 수용성을 나타냈으나, 시설장은 기준 내용에 따라 수용도가 다소 다름.
 - 시설장은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국공립시설 수준의 보육교사 급여 지급, 표준 보육과정 운영 의무화,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시간 제한인데,
 - 보육전문가는 보육비용 수납한도액, 취약보육 제공, 보육과정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클린카드 사용과 엄격한 회계보고 등을 운영기준으로 제시함.
- 공공형 어린이집 재정 지원 방법으로 시설장은 유아 기본보육료와 영유아 인건비 지원 선호 비율이 유사한 수준임. 그러나 유아 기본보육료와 영유아 인건비는 지원금의 성격이 다르므로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나. 보육료 규제 완화 어린이집

- 자율형 어린이집 수용성은 보육료 지불능력과 의사가 주된 결정요인이 될 것이며, 지역적 격차가 나타날 수 있음.
- 자율형 어린이집의 규제 완화 대상은 전문가는 보육비용 수납과 운영기준 모두가 44.4%로 가장 높고, 보육비용 수납만과 보육시설 운영기준만 자율화 하는 방안에는 각각 27.8%가 동의하였음.
 - 규제 완화 대상 범주에 대하여 전문가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모두 43.1%, 보육료 상한선만 32.3%,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만 24.6%로 나타났음.
- 전문가들은 보육료 상한선 조정을 선호하여 완전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실제 시설장들은 보육료 규제 완화 시 가격 인상 의도를 나타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을 나타냈음.
 - 전문가의 걱정 상한선 인상 수준은 150%가 50.8%, 200%가 30.2%임.
- 보육료 규제 완화 방법으로 보육시설의 93%가 영아 기본보육료는 지원하고 유아에 대한 수납 한도액을 완화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보육료 규제 완화 시설은 유아 중심 보육시설이 될 것임을 나타냈음.
 - 영아는 기본보육료를 주면서 상한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기본보조금이 없는 유아만 수납한도액을 완화할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됨.

5. 정책대안

가. 평가인증 결과 등급화 및 공개 방안

- 평가인증 등급 기준은 3단계로 나누는 제1안과 2단계로 나누는 제2안을 제안함.
 - 1, 2안 모두 최상등급 기준 점수는 ① 총점이 95점이고 영역별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 ② 총점 95점 이상, ③ 영역별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의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 제1안 즉, 3단계 구분시 차상위 등급은 총점 90점 이상으로 하고, 이 외 자가시설, 실외놀이공간 확보 등 구조적 변인으로 추가조건을 둘 수 있음.
- 총점, 영역별 점수, 총점 등급, 영역별 등급, 법적 준수 사항 여부 등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기본원칙을 따름.
 - 제1안은 지자체 평가, 평가인증 총점, 영역별 점수, 총점 등급과 영역별 등급, 전문가 평가 등을 모두 공개, 제2안은 제1안 중 점수를 제외하고 등급만 공개하는 방안임. 점수 공개는 시설 재량에 맡김.
 - 이외에 인증 이력 공개는 제도화하지 않고, 어린이집 자율에 맡김.
- 평가인증 결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함.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미인증시설도 검색되도록 전체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검색 가능토록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및 보육아동 부모에게 문서로 발송, 평가인증 관련 정보 변동 시 모두 부모에게 알리도록 함.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정부나 보육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평가인증 관련 정보를 공개함.
- 평가인증 등급 또는 인증여부를 인센티브 지급 대상 선정 기준, 공공형 어린이집 조건, 유효기간 차등 적용 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미인증 시설은 교구교재비, 기본보조금, 장기적으로는 바우처 가맹점 제외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함.
- 평가인증 등급화 및 공개 정책 대상은 원칙적으로 2차에 한하고 1차는 어린이집 희망 시 신청을 받아서 공개함.
- 우수인증시설의 질적 수준 차이 담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시방문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며, 인센티브 제공, 보육료 자율화, 공보육 전환 정책 실시시 평가인증 등급이나 점수 이외에 필수조건 충족 등 추가조건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 지원 정책과의 연계 방안

- 기본보조금이나 차등보육료 등 국고지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실시하기 쉬운 1단계 방안부터 점차 수위를 높이는 2~3단계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1단계의 평가인증과 재정지원과의 연계는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운영비 지원과 연계하는 것임. 이러한 연계는 이미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음.
- 2단계 방안으로는 만 0~2세 아동 및 장애아 기본보육료 지원과의 연계로, 우선 평가인증 참여와 연계하고 점차 평가인증 통과로 강화해 감. 그러나 평가인증 점수나 등급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고려하기는 어려움.
-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보육바우처와 연계하여 우선 평가인증 참여시설에서만, 이후 평가인증 통과시설에서만 보육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인증시설과 지원 연계 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 시기를 미리 공지해야 함.

다.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방안

- 민간 공공형 어린이집 재정지원은 인건비와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이 논의됨.
 - 그러나 유아 기본보육료보다는 인건비 지원 방식이 공공형 어린이집 취지에는 더 적합함.
- 공공형 대상 보육시설이 인증 점수 이외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음.
 - 보육 정원 15인 이상으로 현원이 80% 이상, 12시간 종일제 운영에 한함.
 - 건물 소유형태가 자가이어야 하며, 월 상환액이 시설 운영비의 5% 이내이어야 함.
 - 보육시설 면적이 영유아보육법 상 기준 이상이며 실외놀이공간을 확보해야 함.
 - 대표자의 다른 유형의 유사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중복 운영은 배제함.
 -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시설운영비리 및 아동학대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함.
- 공공형 어린이집은 운영의 제 측면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함.
 - 사후관리로는 매년말 정기평가 및 3년단위 종합평가를 통해 재지정함.
 - 대표자 또는 시설장 변경 및 시설의 매매, 장소 이전, 중대한 행정처분, 시정조치명령 미이행 등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지정을 취소함. 부당사례로 취

소된 시설은 향후 3년간 재지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라. 보육료 규제 완화 어린이집 도입 방안

- 보육료 규제완화 대상은 1안은 특별활동 등 기타 필요 경비만, 제2안은 보육료와 특별활동을 포함한 기타 경비 모두에 자율화를 적용하는 방안임.
 - 규제완화 방법은 현재보다 높은 정도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과 일체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고 보육시설이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
 - 법이나 안내로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조치들은 허용하지 않음.
- 자율화 적용 대상은 우수 평가인증 이외에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12시간 종일제 운영, 건물 자가 소유 및 월상환액이 시설 운영비의 5% 이내
 - 법적 기준 이상의 보육시설 면적과 실외놀이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지역별로 우수보육시설 중 최대 50% 이하까지만 적용함.
- 기타 운영비만 자율화하는 경우에는 영아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지원은 모두 지원하고, 보육료와 기타 운영비를 자율화할 경우에는 차등보육료만 지원함.
- 보육료와 기타 운영비를 모두 자율화하면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지 않음.
- 사후관리로는 매년말 정기평가 및 3년단위 종합평가를 통해 재지정함. 취소사유 및 처리는 공공형 어린이집과 동일함.
- 기타 사항을 고려함.
 - 보육료와 기타 운영비를 모두 자율화할 경우 사실상 영리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자율화 시, 보육료 자체보다 특별활동 비용 상승과 부작용이 우려됨. 그러므로 오전 표준보육과정 운영 원칙은 준수되어야 함.
 - 보육료 자율화가 수용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격차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형 보육시설 확보와 함께 추진되어야 함.

중국 동포 자녀양육 지원방안 연구

서문희, 이윤진, 김진경, 최윤경, 이정원, 박금해

1. 연구 목적,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중국 동포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실태 및 관련 가치관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탐색함. 또한 저출산·글로벌 시대에 주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는 중국 동포의 자녀양육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모색함.
 - 중국동포의 수가 증가하면서 중국동포의 영유아 자녀도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약 2,100여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고 일부는 부모가 불법체류 상태로 무국적 상태인 영유아도 상당수임.
-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 거주 중국동포 관련 제도와 정책 실태 파악
 - 국내 거주 중국동포의 영유아 양육 실태와 자녀 관련 가치관 분석
 - 중국 거주 조선족의 영유아 양육실태, 가치관 파악 및 국내거주 중국동포와 비교
 - 국외의 외국인 자녀양육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시사점 도출
 - 국내 거주 중국동포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나가서 중국 동포의 자녀 양육을 지원 방안을 모색
-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수집 정리 등의 문헌 고찰
 - 국내 거주 영유아 양육 중국 동포 129명, 중국 거주 영유아 양육 동포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국내 및 중국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 대상 국가(중국) 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의 network 구축
 -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족교육연구소(소장 박금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국거주 조선족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2. 국내 거주 중국동포의 영유아 육아실태

- 국내 거주 중국동포 가정의 일반 특성
 - 입국시 사증은 아버지 방문취업(H-2) 31.7%, 어머니 가족초청이 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는 모두 방문취업(H-2)이 가장 많음. 한국에 온 이유는 부모 모두 '돈 벌기'가 압도적으로 많음.
 - 현재 직업은 부의 85%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며, 모는 47%가 무직, 단순노무직 28.6%, 조리·서빙 12.6%임. 월 가구소득은 부 약 168만원, 모 약 100만원임.
 - 건강보험 가입률은 부 67.0%, 모 64.4%이며, 고용보험은 부 33.9%, 모 10.1%임.
- 영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아가 72.1%, 영유아의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이 32.3%임. 이들 영유아는 중국국적이 84.5%이며 14.0%는 무국적임.
 - 영유아의 26.5%가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하고, 전혀 구사하지 못함도 15.8%임. 중국어는 70%가 전혀 사용하지 못함.
- 현재 생활에 대해서는 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이 69% 정도이고, 자녀성장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쪽이 거의 90%로 파악되었음.
 - 응답자의 91%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 양육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럽다'에도 약 80%,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된다'에 92%가 그렇다고 응답함.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에 53%인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영유아 자녀의 40%가 기관을 이용함(한국아동들보다 기관 이용률이 낮음)
 - 이용 이유로는 '자녀의 교육차원에서'가 52.1%로 가장 많고, 미이용 이유는 '자녀가 어려서 적응하기 힘들까봐'가 61.1%로 가장 많았음.
 - 하루 기관 이용시간은 평균 9시간으로, 한국 아동 7시간 21분에 비해 길음.
 - 기관 이용 비용은 월평균 약 268,485원이며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시 월평균 28,611원을 추가 지불함. 비용 지원 혜택은 '없다'가 89.6%임.
 - 기관 이용시 '외국인 특별프로그램'의 혜택은 거의 없으나(85.4%), 기관의 적응은 대체로 잘 하며 기관 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 만족한다고 응답함(81.3%).
- 자녀양육 시 어려운 점은, '양육비 및 병원비 부담'이 70.8%로 가장 많고, 부모가 바빠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와 '아이의 장래에 대한 불안' 순임.

3. 중국 조선족 가정의 영유아 육아실태

- 영유아의 주양육자는 어머니 35.2%, 조부모 18.6%, 전문보모 6.3%임, 가족유형은 핵가족 58.1%, 한부모가족 15%, 조부모가족 10%임.
 - 대리양육 비용은 대체로 월 평균 2,000원미만(한화로 약 40만원)
- 본 조사 대상 가구 중에서도 아버지의 18.5%, 어머니의 12.9%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과거에 한국 거주 경험이 부모 모두 약 27%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 등에 자녀를 데리고 가지 못한 이유로는 “중국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 나을 것 같아서”가 약 40%로 가장 많고, “제도적으로 데리고 나가기가 어려워져서” 23.5%,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16.3% 순임.
 - 부모-자녀 장기간 별거에 대해 63.3%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우려함.
- 자녀양육방식과 가치관 조사 결과, 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육아를 위해 본인이 희생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는 국내 거주 중국동포의 인식과도 일치하는 결과임.
 - 모 학력이 높을수록 ‘3세까지 어머니의 직접양육이 좋다’는 인식이 높음.
- 조선족 유치원 간 비용 격차가 매우 커서, 월 200원 미만을 낸다는 비율이 8%인 반면에 14.7%는 월 1000원 이상을 지불한다고 응답함.
 - 기관 이용 만족도는 4점 만점에서 3.37점으로 높음. 교사만족도가 3.51점도 가장 높았고 시설부분이 3.13점으로 가장 낮음
-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선족 유치원보다는 조선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조선족·한족 연합유치원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며 학업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면서, 조기교육의 열풍이 가열되고 있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이용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4. 정책건의

- 국내 조선족 자녀양육 지원 정책 건의
 - 대부분 단순노무직 장시간 근로로 월 가구소득은 100~200만원대인데, 이들의

87%가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여, 이들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인적 자원이 될 것임.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당면문제로 들었음.

○ 신분의 안정

- 영유아의 80%이상이 한국 태상이며, 무국적 아동이 14%정도임. 일부 부모의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한 자녀의 의료 지원, 심리적 적응과 정체성, 학업의 지속성 등에 어려움이 많았음.
- 모든 아동은 어떠한 구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국내 불법체류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건강 관련 정책대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동포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돕는 절충 방안 검토

○ 보육 및 교육 기회 확대

- 동포가정 중 자녀양육지원의 수혜율이 약 4% 수준으로 미미하며, 이도 개별적으로 찾고 구하는 노력에 의한 수혜가 대부분임.
- 모든 아동에게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시 비용을 일부분 지원하고, 동포 자녀에게 단기적으로 주민번호에 준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상급학교 진학 등 공식적 교육과정 이수 관리 방안을 고려
- 중기적 정책방안으로서 '영주권'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자녀에게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
- 중국 출생 입국 자녀들에 대해서 한국어, 한국 문화, 부모교육,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보급하여 이들의 적응을 지원

○ 의료 지원 방안

- 건강보험의 가입률이 약 60%대로,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자녀양육환경의 충분성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음.
- 단기적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전염성 질환 예방 정책 대상에 국내 거주하는 모든 영유아를 포함시키고, 동포가정 영유아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을 제고하며, 민간 공제 제도 등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관련 지원 활동을 적극 안내
- 중장기적으로는 영유아에 한해서 만이라도 국적과 관계없이 기본 의료 서비스 보장 방안 강구

○ 부모 정보, 상담 등 육아 지원 방안

- '부모 대상' 자녀양육 및 교육의 정보 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여 아동 보육·교육서비스 뿐 아니라 부모들에게 구체적 정보 알림과 양육지원의 노력이 요구됨.
- 보육·교육 기관을 다니고 있는 기관이용 부모 대상의 자녀 양육에의 안내 및 상담 서비스 및 멘토링 제공
-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역 관공서 등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여 영유아기 자녀 양육 정보제공, 상담 등 보다 적극적 지원하고, 중국동포가정이 공동체 네트워크 구성으로 자발적인 원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 장기적으로 국내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육아 정보 제공과 상담, 안내 등의 모든 서비스가 중국동포가정에도 제공되도록 편입, 확대 과정 필요

○ 전달체계의 거점 마련

- 중국동포가정 지원이 다른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과 구분되는 고유한 영역으로 자리 잡도록 하여 거점 기관을 마련, 중국동포가정의 요구와 수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지지

□ 중국 조선족 유치원 지원 정책 건의

-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어야 하는 시기에 장기간 별거나 자녀에 대한 관심부족은 아동 정서발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줌.
- 아동이나 가족을 직접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유치원을 통한 간접적 지원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영어프로그램을 중국 조선족유치원에 보급, 지원하여 영어과 더불어, 우리말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함.
 - 한국전래, 한국전통놀이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된 교재교구 및 도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재조직한다거나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
 - 프로그램·교재교구·부모교육 지원은 한국의 유치원·보육시설과 조선족유치원 간에 자매결연 등 민간차원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

보육 시설장 · 교사 윤리강령 개발 연구

김은설, 박수연

1. 연구의 목적

- 보육시설은 영유아와 그 부모 및 가정,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공익을 위해 설립이 허가된 기관임. 또한 막대한 국가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공공의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그에 따른 책무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2010년 보육인들 사이에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는 '윤리강령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가 행동기준으로 삼을 윤리강령을 제정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직업윤리 의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직종으로서 보육인 윤리강령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더불어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 보육종사자 윤리의식 실태 파악
- 윤리강령에 관한 인식 파악과 의견 수렴
-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윤리강령 개발
-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제언

나. 연구방법

- 기존의 많은 전문직들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외 윤리강령을 수집하여,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윤리강령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함.
-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윤리의식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은 전국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으로, 시설장 286명과 보육교사 481명이 참여하였고, 조사 방식은 우편 또는 팩스를 원칙으로 함. 설문지는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윤리실천정도 질문지와 개인의 도덕성 수준 측정에 사용되는 도덕추론능력(도덕적 판단력) 검사지인 DIT(Defining Issues Test)임.
-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보육교사 윤리강령이 추구하는 가치, 구성과 세부 사항, 문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함.

3. 윤리의식 실태조사 분석

가. 윤리의식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수준

- 시설장으로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영유아를 돌보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졸을 제외한 모든 학력별, 유형별, 경력별 구분의 경우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시설장은 전반적으로 윤리의식을 가지고 영유아를 돌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보육교사는 윤리의식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 있어 시설장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시설 교사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고 법인 교사가 가장 낮았음. 거의가 4점이 넘어 전반적으로 윤리의식이 높다고 함.
- 도덕성 검사에서는 시설장은 37.38, 보육교사는 38.72로 비슷하게 나왔으며, 어떤 집단 구분에 의해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이 점수는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초중고교 교사들의 도덕성 수준 점수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임.

-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윤리 실천수준 조사에서는 시설장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모두 '사회에 대한 윤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음. 또한 '가정에 대한 윤리'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윤리적 갈등 경험 실태

- 보육시설장이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윤리적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41.4%가 있다고 하였고 특히 가정보육시설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음. 보육교사의 경우는 27.8%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왔고 법인 시설에서 가장 높았음. 경험 빈도로는 보육교사의 경우 주 1~2회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다. 윤리교육 실태 및 인식

-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시설장은 52.5%가, 교사는 48.2%가 있다고 응답함. 시설장과 교사 모두 법인과 민간시설 근무자가 윤리의식 교육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시설장에 대한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보다 시설장이 더 높은 비율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보육교사에 대한 윤리교육의 필요성에서도 시설장은 94.9%가 필요하다고 답한데 반해 보육교사는 84.8%가 필요하다고 함. 그러나 전반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의 시기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시가 가장 높은 비율로 지지되었고 다음은 양성 교육과정의 시기였음. 그러나 학력이 높은 교사나 시설장일수록 대학 등 양성과정에서의 윤리교육을 강조하였음.

라. 윤리강령 제정에 대한 인식

- 윤리강령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시설장은 84.7%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고, 보육교사는 71.7%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윤리강령 필요이유로, 영유아 권리 존중, 갈등해결의 준거, 보육의 질 제고 등의 순으로 응답함. 보육교사는 과반수 이상 영유아 권리 존중 때문이라고 답함.

4. 윤리강령의 개발

가. 윤리강령 개발의 배경

-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는 윤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보육인 내부에서 윤리강령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서구 선진국의 경우 보육종사자의 윤리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국가가 많아지는 추세임.
- 직업 성격상 유사한 사회복지사, 학교교사, 유치원교사 등도 윤리강령을 갖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음을 볼 때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임.
- 보육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보다 긍정적이게 하고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윤리강령이 제정되어야 시기임.

다. 윤리강령의 구성

- 서문에서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보육 종사자와 윤리강령의 의의, 윤리강령이 다루고 있는 범위 등을 먼저 제시하여 앞으로 나오게 될 각 장에 대한 도입의 의미가 있음. 뿐만 아니라 윤리강령의 준수에 임하는 의지와 자세를 강하게 제시해두고자 하였음
- I 장. 영유아에 대한 윤리: 모두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들은 다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한 영유아의 기본권 4가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 영유아 기본권리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 할 때, 이와 같은 나열 순서에 따라 윤리강령의 각 조항들이 순서 지워짐.
- II 장. 가정에 대한 윤리: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의 가정과 소통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인식과 태도에 대한 항목을 참고할 수 있게 하였음. 중요한 기본적 의식으로서, 각 가정의 양육가치와 의사를 존중할 것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가정에 대한 정보제공과 참여유도를 강조함.
- III 장. 동료에 대한 윤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보육시설장으로서 보육교사

에 대한 윤리와 보육교사가 보육시설장 및 동료 보육교사에 대해 갖는 윤리적인 측면의 제시임. 보육시설장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덕목은, 크게 볼 때,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에 대한 지원, 보육교사에 대한 존중, 근무여건 개선 등임.

- IV장. 사회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해 보육은 무엇보다 질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임. 공적 비용이 투입되는 시설로서 투명한 재정을 유지하고 사적 이익이 개입되지 말아야 할 것, 사회적으로 영유아 전체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책무를 이행하고, 지역사회 주요 기관으로서 역할을 찾아 이를 실천하는데 참여하는 것도 필요함.

5.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강령 활용 방안

- 양성 교육과정에 필수로 속해 있는 교과목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중 모든 대학과 양성교육원이 공통으로 개설하고 있는 '보육학개론' 수업에서 윤리와 관련한 부분을 다루는 과정을 포함해야 할 것임. 향후 '보육교사론'이 필수 과목이 되는 경우 이에 포함가능함.
- 신규 시설장 직무 교육과정 중 '시설장의 역할과 윤리' 과목에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윤리강령과 도덕적 갈등의 해결'이라는 주제에 대해 보수교육이 필요함.
- 우수 실천사례에 대한 발표회 등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육의 효과를 얻도록 하거나 윤리강령에 대한 활용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윤리강령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윤리강령을 보육교사가 일상적으로 휴대하는 수첩이나 일지, 노트 등에 삽입시켜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사실이나 시설장실 등에 비치하여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일상적인 활용 방법일 될 수 있음.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방안

-영유아·초등학생·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서문희, 설동훈, 최윤경, 김은영, 조혜주

1. 연구 목적,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의 양육실태와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기구·단체의 다문화가족 영유아, 초등학생, 중도입국자녀 지원정책 분석
 - 외국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파악하여 시사점 도출
 - 다문화가족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의 양육, 양육 지원 수혜 실태 및 욕구 파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양육 및 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사업 관련 요구도 파악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세부 지원 사업 방안 모색
-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설문조사, 다문화가정 부모 심층분석 등을 사용함.
 - 다문화가족 관련 자료 등을 수집, 분석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양육 지원 사업 실태 및 요구 자료 분석
 - 영유아, 초등학생, 중도입국자녀 등 총 24가정 심층면접 실시
 - 다문화가족사업 지원단 담당자와 간담회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방향과

통합적 지원 정책의 타당성 검토

2.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정책 및 외국 사례 분석

- 다문화가족 관련 국내 법·제도 및 정책 검토
- 다문화정책 주요 전달체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민간단체 사업을 검토함.
- 외국의 전반적 다문화 정책의 추진과 전달체계, 구체적 프로그램을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3.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실태와 요구 시사점

- 결혼이민자 증가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이러한 아동은 현재는 상당수가 영유아기에 있으나 앞으로 이들이 성장하여 학령기에 들어갈게 됨.
 - 결혼이민자자녀는 2015년에는 200,942명, 2020년에는 302,69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영유아도 2020년에는 현재의 약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 다문화가족 자녀는 영유아, 초등학생 모두 국내 자녀와 비교하여 인지, 언어 및 정서, 사회성 발달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가 이들 대상의 정책을 강화하여야 하는 배경을 제공함.
- 자녀 양육에 가족과 아울러 이웃이나 결혼이민자들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육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시댁 식구가 48.1%, 이웃이라는 응답이 33.3%로 높게 나타났음.
- 영유아 사교육 이용이 일반아동보다 낮아서 이러한 교육수혜의 격차가 취학 전 학력의 차이로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교육서비스 이용권등 부가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교육과정의 특화와 함께 맞춤형

개인교육서비스 제공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어린시기부터 언어 교육 지원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함. 초등학생의 학업부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어습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임.
-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양육비 지출의 가계 부담이 큰 것으로 보임.
 -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 교육 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학원비 마련이 27.4%로 가장 높음.
- 일반 아동에 비하여 학원 등 사교육 비율은 13% 수준으로 낮은 편이므로 공부방 등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지원이 필요함.
 -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후에 혼자 지낸다는 아동이 14.0%이고,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13.3%임.
 -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 교육 상 가장 어려운 점은 학원비 다음으로 예습·복습지도, 숙제지도 등이며, 초등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도 기초교과지도, 학교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등임.
- 중도입국자녀는 연령대가 다양한데, 특히 한국어와 학업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되고 있음.
 -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취학연령 자녀들의 경우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적응을 힘들어 하였음. 그러나 중도입국자녀에게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곳은 매우 제한되어 있음.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검토 시사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 전국의 다문화지원센터의 사업이 보다 체계화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 사업이 충분하지 않고 산만하게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중도입국자녀 지원 사업은 정규사업에 포함하는 곳이 10%에 지나지 않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기관간의 연계가 부분적으로 이루지고는 있으나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보다 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연계사업을 실시하는 센터는 과반수에 못 미침.
- 아동 연령별로 적절한 서비스가 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들이 제시한 우선적으로 추진할 영아관련 사업은 신체 및 건강관리, 정서발달, 언어발달 지원의 순이었음.
 - 유아대상 사업은 언어발달 지원이 30.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 한국어 교육의 순이었음.
 - 초등학생 대상 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원사업과 학습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공부방·챌프 등 방학기간 활동, 방문교육 순임.
-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사업 요구는 학습지원, 언어 교육, 직업교육, 정서 지원, 인성 및 사회성 발달 지원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그 방법도 매우 다양하여, 센터별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었음.
- 전문기관의 운영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 대안학교 설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일부를 지정하여 중도입국 자녀 전문 지원센터로 운영, 제도권 학교로의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운영, 다문화청소년센터 및 다문화청소년 쉼터의 운영 필요성 등임.

5. 정책제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지원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아동 연령별로 적절한 인력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 지원 사업이 체계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영유아 지원 방안

- 영유아 발달 단계별 발달검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을 강화함.
- 발달 및 한국어 교육 지원은 센터와 아동 중심의 파견 방문사업으로 이루어 지도록 별도의 전문인력을 배치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영유아 대상 방문 학습지와 학습지 교사파견을 지원함.
-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자녀와 부모의 관계 향상 및 정서 지원을 도움.

□ 기타 사업 영유아 지원 방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교육과정을 특화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이중언어 등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맞춤형 개인교육서비스를 확대함.
- 다문화가족 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문화가족 밀집 거주 지역에 국공립시설을 확충하여 순 보육료 이외 부가적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초등학교 이외 정책방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지원사업과 초등 학생 한국어 교육 사업을 실시함.
-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도 방문 학습지와 학습지 교사파견을 지원함.
-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 학령기 아동이 있는 기관과 연계를 강화함
- 멘토와 아동간의 유기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연계 및 관리기능을 강화함.

□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 센터에서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교육 사업을 실시함. 한국어 교육은 센터 내에서 실시하거나 방문지도로 함.
- 학교에 다니는 입국자녀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으로 학습 지원사업을 실시함.
- 중도입국자녀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라고 하여도 곧 학교를

졸업하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교육이나 일자리와 연계하는 활동을 실시함.

-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서 지원, 인성 및 사회성 발달 지원도 주요한 과제이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서 지원, 인성 및 사회성 발달을 지원함.
- 센터에서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연계사업을 강화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일부를 지정하여 중도입국 자녀 전문 지원센터로 운영 하는 방안을 모색함.

□ 중도입국자녀 기타 사업

- 중도입국자녀가 일정 규모 이상되는 학교 등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추가적으로 특별 학급을 만들어서 전반적 학습을 보충해 주는 방안을 모색함. 이때 멘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일반학교 진학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 운영 방안을 고려하거나 대안 학교를 만들어서 제도권 학교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습을 돕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함.

□ 부모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정책은 생애주기별로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라 차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몇 가지 정책 건의를 하면 다음과 같음.

-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가족 영유아 부모의 한국어 교육 기회를 확충하도록 지원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 육아정보 나눔터를 마련하여 어머니들이 영유아자녀와 함께 모여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감.
- 다문화가족의 효율적인 육아지원을 위해 가족 내 지원 강화와 친구 및 자조모임과 같은 인적지원 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함.
- 다문화가족지원 정보포털을 구축하여 그 안에서 육아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기관 중심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한 부모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연구자료 2011-01

2010 연구과제 요약집

발행일 2011년 1월

발행인 조복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 7, 10,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